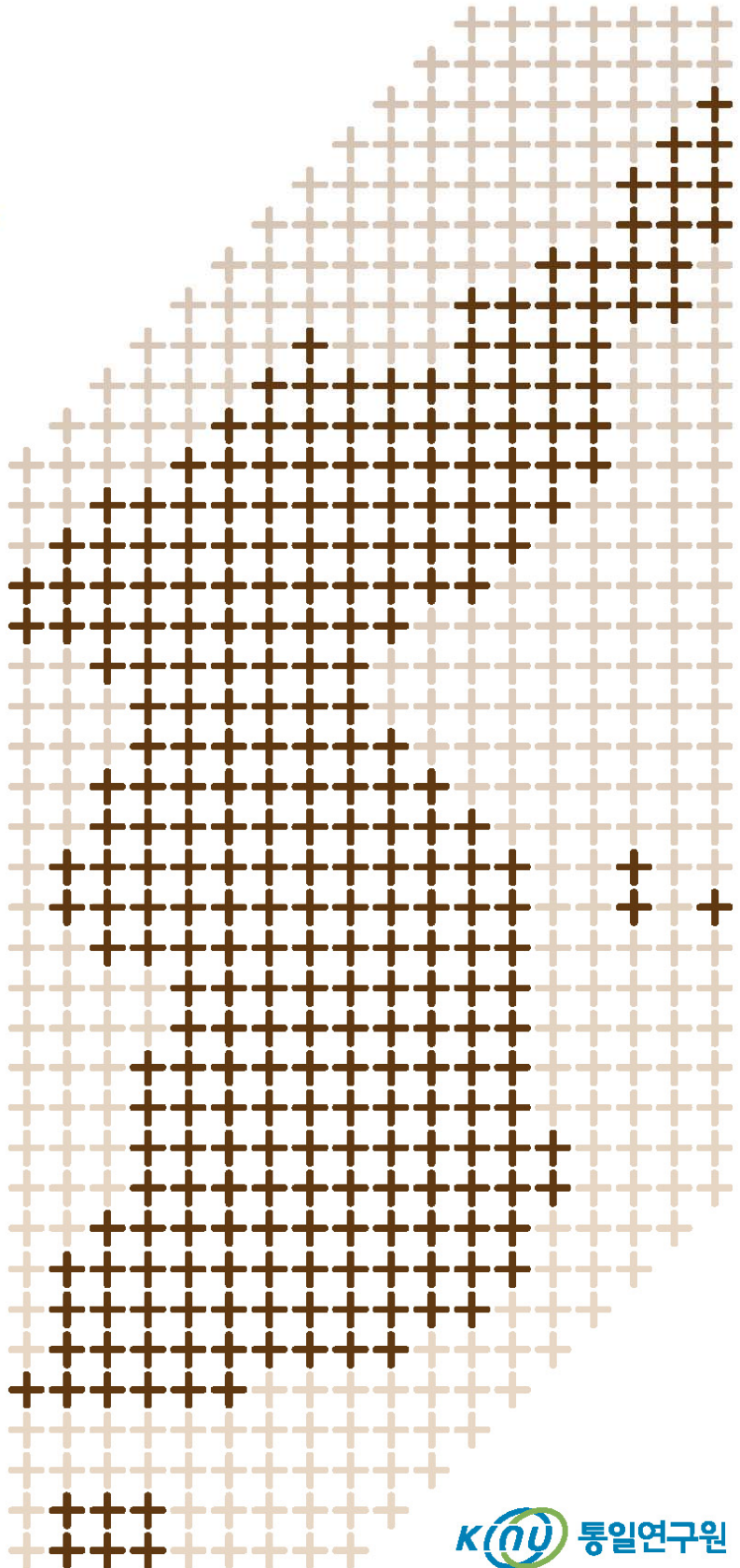


# KINU 통일+



## + 정세와 쟁점 분석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통일문제  
신정승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대사

한중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상호 인식·쟁점·전략의 한계  
문홍오 | 한양대학교 교수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이희욱 | 성균관대학교 교수

## + 연구 동향과 서평

통일한국의 과제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임예준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의 대안적 대전략: 자제?  
Barry R. Posen,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김상기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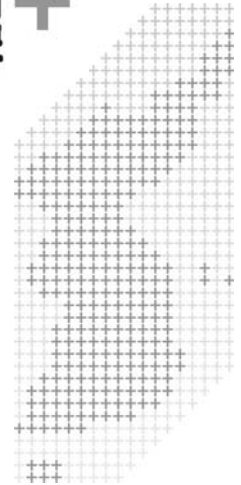
적과 마주하기:  
전쟁과 평화를 통한 정치심리학적 여정  
Vamik D. Volkan, *Enemies on the Couch:  
A Psychopolitical Journey through War and Peace.*  
홍신애 | 건국대학교

화해, 안보공동체,  
통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한 제언  
Charles A.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이상근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중국의 북핵 평가 및 대북핵 정책의 '진화'  
장투어성(張洵生) 편저, 『핵전략 비교연구(核戰略比較研究)』/  
장투어성, 『북핵문제와 중국의 정책(朝核問題與中國的政策).』  
이영학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KINU 통일+



---

『KINU 통일 플러스(+)]는 북한·통일 관련 정책적·학술적 쟁점을 발굴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것을 통해 북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 KINU 통일 플러스(+)

2015년 겨울호 Vol.1 No.4

---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박형중

등 록: 제2-02361호 (97.4.23.)

발 행 일: 2015년 11월 30일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02-2023-8000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통일연구원 2015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Contents

## + 정세와 쟁점 분석

- 1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통일문제 \_03  
신정승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대사
- 2 한중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상호 인식·쟁점·전략의 한계 \_19  
문흥호 | 한양대학교 교수
- 3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_33  
이희옥 | 성균관대학교 교수

## + 연구 동향과 서평

- 1 통일한국의 과제 \_51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임예준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2 미국의 대안적 대전략: 자제? \_63  
Barry R. Posen,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김상기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3 적과 마주하기: 전쟁과 평화를 통한 정치심리학적 여정 \_79  
Vamik D. Volkan, *Enemies on the Couch: A Psychopolitical Journey through War and Peace*.  
홍신애 | 건국대학교
- 4 화해, 안보공동체, 통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한 제언 \_91  
Charles A.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이상근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5 중국의 북핵 평가 및 대북핵 정책의 '진화' \_103  
장투어성(張沱生) 편저, 『핵전략 비교연구(核戰略比較研究)』/  
장투어성, “북핵문제와 중국의 정책(朝核問題與中國的政策).”  
이영학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세와 쟁점 분석

- 1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통일문제**  
신정승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대사
- 2 한중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상호 인식·쟁점·전략의 한계**  
문흥호 | 한양대학교 교수
- 3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이희옥 | 성균관대학교 교수





#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통일문제

신정승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대사

## 1. 서론

2014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기하고 이어 7월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정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통일담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엷어지고 있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리고,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한 민족으로서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통일된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 관계와 주변 주요국들에 대한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통일이 당장의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이 관심을 갖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반도 통일문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평화적 통일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자신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역량, 북한의 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주변 대국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가만



히 있어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내에서 통일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비록 한국이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환경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 타파에 대한 관련국들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 최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력 행사도 마다치 않는 러시아나 한반도에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입장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들 두 나라의 입장은 각각 중국이나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중심으로 최근 동북아정세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미중 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두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통일외교 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2. 최근의 미중 관계와 한반도

지난 30여 년간에 이루어진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중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은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양자 동맹 강화나 TPP와 같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2년 미국의 신 국방전략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의 군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15년 2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나 지난 9월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반면에 중국은 평화발전과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력의 확장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하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는 향후 미중 관계의 전개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9월 29일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의 방미가 역사적 방문으로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며 미중 간 전략적 신뢰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지만, 중국 밖에서는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보분야에서의 합의 정도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국빈 방문 시 개최된 정상회담의 결과로 오직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만 발표된 것도 그 만큼 양국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희망하였지만,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충돌하지 않고 윈-윈(win-win) 하자는 시진핑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회피하였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사례와 같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익에 대한 '상호존중'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상공비행(over-flight)의 자유를 강조하고 남사군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해상매립과 군사용 시설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중국은 관련 지역이 중국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곳이며 해상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공사를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 내 인권문제와 티베트 문제를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다만 이번에 군용기들 간 조우시의 대처요령이나 군사적 위기정보에 대한 통보 조치 등을 규정한 문건에 합의를 한 것은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양국 간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이 완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금번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강한 압박에서 느낄 수



있듯이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한 예비역 해군 제독은 얼마 전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미국은 반나절이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우회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시진핑이 미국의 동맹체제를 비판하며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시진핑 2014, 432),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미중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함께 아태지역에서의 협력을 증진하자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진핑은 오바마와의 회담에서 남사군도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매립과 시설공사가 결코 군사기지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AIIB 설립에 대해서도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이루기 희망하며, 이 구상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이 일시적으로 전술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광양회 전략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에는 상호 이견과 대립이 존재하지만, 양국은 무역과 투자 면에서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대시하면 서로 손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3번째 교역상대국으로서 2014년 왕복 교역액은 5,550억 불이며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13년 610억 불에 달하고 있다.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들도 미중 간의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지역분쟁의 해결, 국제적 테러방지, 비확산, 지구 기후변화, 세계 경제회복 등 광범위한

---

범위에서 미중 간의 협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력이나 군사력 그리고 국제적인 소프트파워 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차이는 아직 상당하며 중국이 이를 따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ough)는 중국의 부상이 계속되어 미국과의 경쟁은 심화되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은 불완전한 (partial) 강대국으로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도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Shambough 2010, 464-467). 또한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제프 배이더(Jeff Bader)도 중국은 1인당 GDP가 아직 개도국 수준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최대의 과제가 외국에 대한 모험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거나 주변국들과 본격적인 무력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중국으로서도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 미국은 최대 수출시장일 뿐 아니라 중국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와 기술의 주요 원천이고 미중 양국 간에는 에너지, 과학기술, 농업, 교육, 환경보호 등 영역에서 상호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종합하면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안별로 협력하면서 상호 간 전략적 경쟁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비록 그것이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 인근 지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향후 상당 기간 일본·호주·인도 등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 유지를 위한 균형자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의 장소가 될 것인지는 한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현행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대국으로서는 현상유지를 원하게



된다. 미국은 중국이 AIIB를 통해 국제개발금융질서를 변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하였고 중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을 전후질서의 파괴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강대국으로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미중 양국이 안보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실제로 지난 9월 미중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 평화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며, 9·19 공동성명 내용도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함으로써 미중 정상이 함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양국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넘어서는 일로, 비록 한국으로서는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 지역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 국제질서의 현상타파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명분상 찬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국의 국익 관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

### 3.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 가. 미국의 입장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주도 하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과 법치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 등을 전제로 통일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Joint Fact Sheet)는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시에 발표된 양국 간의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자로서 미국의 이념과 그간의 행동을 통하여 가늠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룬 모범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평화 등 미국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 시기에 있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이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predominant status)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관계의 강화와 환태평양경제협력체인 TPP를 위주로 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재균형 정책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일시적인 정책변화가 아니라 여러 행정부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동맹의 강화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한국은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데 일본과 더불어 든든한 보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미국



은 기대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으로서도 골치가 아픈 북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이 지역에서의 안보유지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투자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제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의 증동 등 여타 지역 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의 체제 속성으로 인한 지역 내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통일한국의 경제적인 잠재력은 북한에서의 개발수요에 힘입어 대단히 커질 것이며 이는 미국에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게 되며 특히 북한 경제재건 과정에서 미국은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우선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질서의 안정 그리고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여, 비록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중국 등 관련국들이 자국 중심의 일방적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역시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한반도에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은 자국의 대규모 지상군 병력이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책 경향이 존재한다. 미국 내 여론도 이에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 등과의 갈등으로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병력의 전개가 요구되는 상황은 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그와 관련된 기술자들의 향배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일한국이 정치·경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핵보유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서 미국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핵물질과 핵개발 기술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



---

WMD를 한국이 접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또한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지거나 중립화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자산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도 갖고 있다. 한미 동맹은 미국에게 있어서 미일 동맹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통일 한국의 결과로 친중(親中) 정권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이 해체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서 대단히 큰 전략적인 손실일 것이다. 사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중국이 통일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 중립화나 다자안보체제 구상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 그것은 한민족에 의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며 그 관건은 통일의 방식과 통일한국의 대중 정책 향배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먼저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남북한 주민들 공통의 바람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무력에 의한 통일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폭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결코 중국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발전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화로운 대외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으로서는 무력을 통해서도 통일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전쟁의 교훈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다시는 남북한 어느 일방의 무력도발에 의해 중국이 군사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 국익의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항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첫째는 역시 통일 한국의 대중정책의 향방이고 이에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핵심을 차지한다. 중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깝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가까운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이 전적으로 친미(親美) 국가가 되고, 심지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주도로 통일이 달성될 경우 통일한국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특히 통일한국에서 주한미군이 국경지역까지 북상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중국의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힘의 구도에서 중국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현대의 전쟁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충분히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에 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이는 아직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핵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통일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만일 핵무기와 관련하여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중국 국민의 인명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국내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의 핵무기가 한민족의 핵무기이므로 통일한국이 당연히 핵무기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비록 최근에 와서는 별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통일된 한국

---

이 중국과의 국경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사실 현재의 중북 간 국경선에 관해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국경선은 대체로 1910년 당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협약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경위가 어떻든 당시 조선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했었기 때문에 한일 병합조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난민들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조선족의 동요와 함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고 있다.

#### 4. 결어: 한국의 바람직한 통일외교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 주도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과 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간주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북한 핵문제나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거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지하는 한반도 통일은 조건부(자주적, 평화적)이며, 내심으로는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현재 남북 간 국력격차 및 가치와 이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은 요원하며,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에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도 만일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은 친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취하길 바라며, 구체적으로는 통일한국이 어떠한 군사집단에도 가입하지 않고 모든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영토분쟁을 포함한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중 양국의 입장을 중



합해보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전략적 이해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한국의 대외정책 비전을 정하고 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한국으로서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그중에서도 한미 동맹의 향후 향방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미 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였다. 한미 양국은 양국 공동의 가치관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통일한국에 있어서 기존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은 사라지겠지만 그 대신에 새로운 안보위협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다른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이 중국을 목표로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0여 년간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최근 박대통령의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적어도 외형상으로 가일층 강화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중국은 서로 마주보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국가로서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양국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대상이라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간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은 별 마찰 없이 잘 발전되어 왔다. 중국의 많은 인사들은 과거 역사적 경위에 의해 한미 동맹이 탄생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한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

---

다. 중국은 한미 동맹이 중국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반면에 미국의 보수층에서는 한국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결국은 중국 편에 설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도 나타나는 한편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내에서는 이와 같이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가 과연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한·미·일이 연계하여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assertive) 중국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보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 관계의 상황에 따라 한중 관계의 조절을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현재의 한국은 구한말과는 달리 경제력을 갖춘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국익에 따라 대외관계를 관리해 나갈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양립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핵심적인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익인 것만큼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중 양국의 관심사항에 유념하여 통일한국은 어느 나라의 안보에도 위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 통일이 관련국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방향에서 통일한국의 정책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한국은 평화를 지향하며 주변 어느 국가와도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한국은 비핵국가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적절한 시기에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일한국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며 개방된 국가로서 이 지역 모든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한국으로서는 안보에



대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한미 동맹을 필요로 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을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점진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참가하는 다자안보체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일한국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 미국·중국을 위시하여 관련국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중 간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특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던 중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통일의 유익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논리로서는 첫째,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평화적 안보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이다. 즉, 통일한국은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통일로 인하여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 등으로 지속되던 한반도의 불안정이 해소되고,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을 끌어안기 위해 중국이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한반도 통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쌍방 간은 물론이고 지역 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현저히 증대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동북지방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중국 간 육로 교통이 가능하기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접점을 찾아 그 협력을 크게 확대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통일에도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과 대만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대만의 독립시도에는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통일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교량자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 내 다자안보 협력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다자안보체제가 마련되기까지는 한국의 안보를 감안해서라도 한미 동맹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국과 긴밀한 소통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미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주요 사례가 될 뿐 아니라 시진핑 지도부가 주장하는 ‘신형 대국관계’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

\* - 본고 통일관련 부분에는 필자와 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 국가안전보장연구원 박병광 연구원이 2014년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



## 참고문헌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서울: 와즈베리, 2015.

Bader, Jeff.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2.

Shambough, David. 『중국, 세계를 가다(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아산정책연구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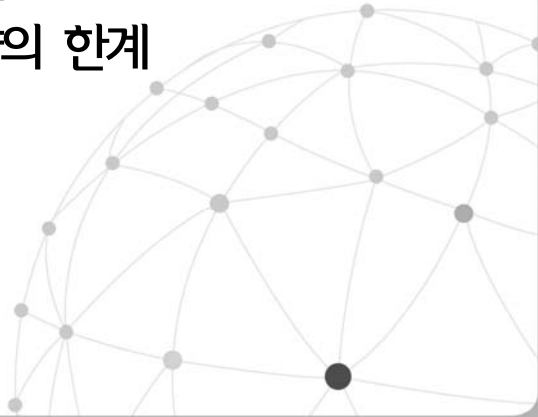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

王毅谈习近平主席对美国进行国事访问并出席联合国成立70周年系列峰会.  
<<http://www.fmprc.gov.cn/web/wjzbzd/t1301679.shtml>>.



# 한중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상호 인식·쟁점·전략의 한계

문흥호 한양대학교 교수



## 1. 문제 제기

2015년 9월 2일의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관계 및 한반도 현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대내외적 차원의 다 목적 행사로 기획한 반(反)파시스트 및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다. 이와 함께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모종의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한중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과 범위까지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귀국 과정의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한중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이 중국과의 평화통일 논의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중 정상의 한반도

통일 논의가 기존의 의례적인 수준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 명시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에서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태도를 감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 박 대통령이 암시한 바와 같이 모종의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양국 간 논의가 과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이를 위한 조건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대북 인식과 기본 전략, 그가 원하는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중 간의 통일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중 간의 통일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가장 먼저 제기될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철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평화’와 ‘자주’의 전략적 의미와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가능한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 평화와 자주 문제에서 중국을 납득시키지 않고서는 중국과의 심도 있는 통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셋째, 시진핑 지도부의 최근 대북한 정책 변화 움직임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무시와 방치에 가까웠으나 점차 기존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한중 평화통일 논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중 양국의 통일 논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한중 통일 논의의 쟁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데 분석의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중 간의 평화통일 논의 자체보다는 그것이 갖는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더욱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 2.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상호인식의 한계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의 한반도 인식은 시기별로 과거·현재·미래를 구분하고, 사안별로 전략적 판단과 대응을 달리하는 매우 탄력적이고 복합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과거형 인식’으로써 이는 중국의 혁명전쟁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맺어진 북한과의 이념적·역사적·인적 유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는 지금도 한반도 및 북한에 대한 시진핑의 인식 속에 엄연히 잔존하며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현재형 인식’이며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정치 발전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적·경제적 현실과 최고지도부의 부도덕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북한 지도부의 시대착오적이고 호전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분명하게 대비된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정책의 최상위에 놓고 있는 중국으로써는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아’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미래형 인식’으로 이는 시진핑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과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북한 체제의 존속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 주석의 현실적 관점에서 남북한 국력의 총체적 불균형에 따른 한반도의 현상 타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시진핑 주석의 미래형 인식에서는 비록 남북통일이 아직은 핵심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점차 중요한 전략적 고려 사항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중 간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시 주석의 미래형 인식이 극대화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은 과거, 현재, 미래형 인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응을 차별화하는 대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을 최대한 균형



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영향력의 총체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중·북중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정책수단을 통해 두 개의 양자관계를 최대한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현실적으로 다른 국가가 답습하기 힘든 중국만의 고유한 자산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우려하고 특히 인민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하는 김정은 후계 체제의 대내외 정책노선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를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대 북한 정책결정 과정의 구조적 특성상 특정 지도자 개인의 인식이 곧바로 정책 변화로 연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 이익의 관점에서도 북한체제의 존속과 영향력 확대 유지가 아직은 유용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북한체제의 존속 필요성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 차이로 인해 적어도 현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 3. 평화적, 자주적 통일의 쟁점과 한계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공동성명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은 남북한이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관심과 논의 수준이 시기별, 정권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기본 입장과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시종일관 고수하는 한반도 통일의 대전제는 평화적·자주적 추진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사 한중 간의 초보적인 한반도 통일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논의의 개시 단계부터 평화, 자주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다. 더 큰 어려움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통일과정의 평화와 자주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우선 첫 번째 예상 쟁점으로 평화적 통일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 통일과정의 평화적 유지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다. 우리가 통일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통일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평화의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민족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비평화적인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과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통일이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또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러한 통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전제는 우선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부의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지지가 불가결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권력 구도와 내부 통제 상황, 남북한의 교류협력 수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내외 환경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전폭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두 가지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통일의 과정과 목표, 한반도의 미래상을 좀 더 평화적이고, 남북한의 상생을 담보할 수 있으며, 한반도 주변의 평화·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 실현의 기간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재설정하고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요인을 긍정적으로 결합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적인 방안은 남북한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구상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만큼 남북한 관계, 주변국 관계를 무리 없이 풀어갈 묘안은 없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번번이 선의의 정책 추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선순환 구조를 가동시키기 위한 큰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중국내 주요 인사들의 관점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상호 이해

와 조율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두 번째의 예상 쟁점인 자주적 통일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에 비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지지 조건으로 강조하는 자주적 통일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 특히 미국·일본의 개입이 없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상호 노력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며 아울러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전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여타 분쟁 지역으로 확장되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일과정이 본격화될 경우 남북한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통일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국이 주한 미군기지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배치 등을 통해 한반도를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 정부가 현재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동안 이양시기를 확정하고 적극 추진되던 전시작전권의 이양문제가 사실상 무기 연기되었다는 점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한국 군부의 자주국방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과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존재하는가? 결코 쉽지 않은 구조적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한미 동맹, 북중 관계 현실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역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9월 2일의 한중 정상회담, 9월 3일의 전승절 열병식 참여, 10월 10일 시 주석의 대북 축전 및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과 열병식 참관,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의 한미 동맹 강화 및 대북정책 공조 합의 등 최근의 사태 추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우리가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유연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성과가 중국이 강조하는 자주적 통일 노력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의 '자주성' 강화 방안은 역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미 동맹의 강도 조절 밖에 없다. 칭화대학의 옌쉐통(閻學通) 등 중국 내 일부 학자들은 1961년의 '조중 상호 원조 조약'이 유명무실하며 특히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관련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도 아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 움직임, 남한의 군사적 의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의 평화통일 논의를 시작하고 일정한 성과를 바라다면 이 모든 동향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대비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 논의는 그야말로 일시적·정치적 관심에 불과하며 별 실효성 없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한중 간의 한반도 통일 논의 과정에서 통일의 평화적, 자주적 성격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에는 심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한국 정부가 평화적·자주적 통일에 대한 '능력'은 차치하고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 또한 유의미한 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사실 현 단계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적·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심 한국이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이 한반도 통일 지지 조건으로 제시하는 평화적·자주적 통일의 문제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충족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중국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굳이 심각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부담감이나 의무감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적·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평화·자주라는 조건과 단서만 부가하면 한국 주도의 무리한 통일과정을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차피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하면서도 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진실성이 없는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대응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 4. 대북한 ‘선택적 균형 전략’의 한계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상호 인식과 통일관련 쟁점의 한계와 함께 중국의 현재 단계 대북 전략 역시 한중 간 통일 논의의 엄연한 한계 요인이다.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감정적 접근을 자제하고 핵심 이익의 확대·유지 차원에서 전략적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즉 중국은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서 대북정책의 좌표와 수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선택적 균형 전략(strategy of arbitrary balancing act)’을 지속 가능한 대북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체제의 존속과 전통적 우의의 기본적 유지를 전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은 사안의 성격, 한반도 주변 정세, 중국의 내부 여론, 남북한의 반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북중 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택적 균형의 개념 속에는 대북한 영향력 유지에 대한 자신감, 북한의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일종의 무시와 회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고유한 지분 의식 등이 종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 의식을 외형적으로 쉽게 표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의 ‘조선’에 대한 보호국 의식은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한국전쟁 이후 적어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보다도 관여할 명분과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이는 대개의 경우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강 건너 불구경처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지만 내면적으로는 국경지역의 안보 관리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당연한 지분’에 대한 확보 의지가 담겨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은 중국이 북중, 한중 관계와 한



---

반도 문제 전반에 갖고 있는 영향력과 뿌리 깊은 지분 의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운용 여하에 따라 많은 유용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선택적 균형 전략이 갖는 유용성은 첫째, 북한은 물론 한국에 대해 적절한 압력·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북중 관계를 동맹관계에 접근시킴으로써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 안정의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북중 관계의 강도와 수위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즉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한반도정책 추이를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대북 영향력 행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과거 중국이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해결이 어렵거나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한 사안에서 탈피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던 것처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들 들어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2014년 4월 10일 워싱턴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미중 평화와 안보협력’ 세미나에서 미국이 자신들에게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라는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를 요구하고 만일 중국이 실행하지 못하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반박하는 논리는 북중 관계가 과거와 달리 정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북 압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선택적 균형전략은 북중 관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유형, 무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균형 전략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의 한계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 역시 상대적이며 영향력 행사의 조건과 환경도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체제의 존속과 기본적인 우호협력 관계 유지를 포기하지 않는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북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이다. 둘째, 북한이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 차원에



서 러·일·미 등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을 경우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셋째,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불분명한 원칙에 대한 한국의 불만 역시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오가는 대북정책의 유용성을 제약할 것이다. 즉 중국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함몰되어 한반도정책을 지나치게 자의적, 편의적으로 추진할 경우 북한은 물론 한국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택적 균형 전략을 제약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선택적 균형 전략이 한계와 부작용보다 유익함이 훨씬 큰 저비용·고효율의 전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양국이 한반도 통일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5. 맺음말

한중 간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상호 인식, 주요 쟁점에 대한 근본적 대립,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양국의 평화통일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며 설사 초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심도 있는 통일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우선 중국의 대북한 인식 및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포기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용인하는 수준까지 변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김정은 리더십의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나 실제 정책의 변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또한 중국의 특정 기관, 인사가 한국의 정책 방향에 매우 부합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들이 주류의 입장을 대

---

변하는 것은 아니며 주장하는 내용도 대상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중국 내의 여론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가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중국내 여론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관계 및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중국 청년층의 객관적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과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6만 여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선결 과제이자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재’라는 점을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 이들이 한중 관계의 미래 주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대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평화적, 자주적 통일 원칙은 한중 양국의 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남북 관계의 생성, 변화 과정의 국제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중국 역시 한국이 현 단계에서 평화와 자주 문제를 극복하면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강조하는 한반도 통일의 평화적·자주적 조건은 자신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방향에서 한국 주도의 일방적인 통일이 추진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평화·자주의 전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중국과의 통일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평화·자주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 우선 평화의 문제는 남북한의 교류협력 확대와 군사적 긴장 해소가 그 출발점이다. 남북 관계가 상생을 위한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자주 문제는 결국 한미 동맹과 직결된 것으로서 평화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이는 결국 한국의 안보적 자주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의 신뢰 증진 ⇨ 군사적 긴장 완화 ⇨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 한미 동맹의 강도 조절 ⇨ 한국의 안보적 자주성 제고 ⇨ 대중·대미 관계의 균형적 유지 등' 일련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이 북한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한 선택적 균형 전략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역시 한중 간 한반도 통일논의의 억제 요인이다. 즉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 냉각 기조를 유지했던 대북 관계를 '적당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동맹관계와 정상관계가 병존하는 이중구조로 전환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유용한 정책이지만 심도있는 한반도 통일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다분히 미국·일본 등을 의식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유지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미 관계, 중일 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진전 등에 따라 변화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상의 한계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중국과의 한반도 평화 통일 논의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이 많으며 현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반발과 비난 위주의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무시와 방치에 가까웠으나 이는 북한에 대한 포기가 결코 아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시 주석의 강한 거부감 때문에 '특혜' 없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맹관계과 정상관계를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서 사안별 좌표와 정책 수위를 결정하는 '선택적 균형 전략'을 통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축전에서 '김일성' 주석까지 거명하며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대를 이은 우의'를 강조하고 심지어 '조선식 사회주의의 성공'을 축원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특히 10월 10일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함께 북한군 열병식의 전 과정을 참관한 것도 최근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

---

의 심각한 불균형에 대한 조정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자체에 급급하기 보다는 우선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대내외 환경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은 남북한의 교류협력 확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평화와 자주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물론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지지 혹은 반대만으로 좌우될 사안은 분명히 아니고 그들의 일거일동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지만 중국 요인이 핵심적인 사항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한반도 통일 문제를 긴 안목으로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진정 염원하는 것과 ‘자기 희망적’으로 통일을 사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인 비전과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입각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북한과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해묵은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대내외적 확산, 정치적 구호가 아닌 냉철하고 차분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통일준비의 ‘도광양晦(韜光養晦)’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 논의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를 통해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비록 수교협상 과정에서 한국전쟁과 대만 문제 등 냉전이 남긴 역사유산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지만,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영향 속에서 한중 수교는 그것 자체로도 외교적 파장이 컸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총론에서 지지하고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수교 이후 지금까지 대체로 지속되어왔다. 다만 북한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각종 도발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경색된 반면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는 크게 발전하는 인식의 차등화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한 정책 공조를 강화했다.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신중

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는 한국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한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원산(劉云山)을 파견하면서 북중 관계의 재정상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한중 간 통일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한 공동 인식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데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중국의 한반도 통일 논의의 역사

1992년 수교 당시 중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대한민국외교부 2013, 2)”했다. ‘한민족에 의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자주 통일을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이나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어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당시에는 “남북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대한민국외교부 2013, 7)”고 밝혔다. 즉 보다 명시적으로 ‘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한편 4자 회담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 외교에서 ‘동반자관계’는 비동맹, 비적대, 제3국에 대한 적대반대(不針對第三國)를 의미한다(金正昆 2007, 87-88)는 점에서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때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남북 관계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었고, “한국 측이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온 긍정적인 조치들을 평가하고 한국 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지지했다(대한민국외교부



---

2013, 21).”이어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중국은 남북한 간 화해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한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하여 확고 불변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대한민국외교부 2013, 33).”비록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부의 외교정책인 ‘평화와 번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기존 한중 관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경사정책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문제와 국제 문제도 협력하는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 한국을 묶어 두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Lee 2010).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냉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남북한 모두에게 ‘냉정과 절제’를 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불신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약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촉발요인이었지만,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한국 정부의 대미 경사정책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흡수통일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한국 내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중국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고(대한민국외교부 2013, 55)” 이어 후진타오 주석의 한국 답방 시에는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그간의 중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대한민국외교부 2013, 68)”고 재천명했다. 이것은 ‘긍정적인 조치를 평가’한다거나 ‘남북 관계 진전을 환영한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즉 한국의 통일정책

에 대한 ‘지지’ 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자국의 입장을 병렬하는 데 그쳤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의 핵심 외교정책이었던 ‘비핵·개방·3000’의 새로운 버전인 ‘상생과 공영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한국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유보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한 한반도정책의 원칙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한중 협력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대한국 접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한미 동맹 활용론’이 넓게 퍼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 우의를 과시하는 한편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후원(後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2.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간 통일 논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중 관계가 심화되었고 협력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은 상황적으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체제 내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했고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 숙청의 정치가 나타나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상호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중국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정책의 세 가지 원칙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보다 먼저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핵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경고를 표출했다. 이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정당 간 교류를 통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으며 대북정책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했기 때문에 중국이 한중 관계 발전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다. 실제로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형 대국외교에 기초한 대국 관계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 주목했다(李熙玉·于婉瑩 2014).

그러나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창과 거울이라는 점에서 한중 간 ‘전략관계’를

---

고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전략관계’의 핵심이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있었다는 점에서 한중 간 협의는 간단치 않은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한반도 통일준비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였고 한중 FTA 타결,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참여, 전승절 참석과 같은 정책적 신뢰를 통해 중국의 호응을 이끌고자 하였다. 중국도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이른바 ‘돌발’사건을 연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중 간에 한반도 통일논의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 비해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한중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제약요인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결과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화가 있었다. 다만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논의수준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Lee 2013). 이것은 2015년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되었다. 9월 5일 상하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기자와의 회견에서 “이번에 시 주석과 여러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 중국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다뤄졌던 문제”라고 밝히면서 한중 간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한중 간 통일논의는 한중 양국이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을 추구했다는 의미가 있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 중국과 여러 층위에서 본격적인 통일기반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양국 정부의 발표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은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



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직접적 당사자로서, 남북이 모두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결국에는 자주와 평화의 통일을 이루길 희망’하면서 ‘자주’의 원칙을 예의 강조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의 차이는 양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만, 한국은 한중 간 한반도 통일 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전략적 협력의 고도화를 추구한 반면 중국은 북한을 공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국가이익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 3. 중국의 한반도 통일 논의의 새로운 흐름

#### 1) 새로운 논의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지속과 변화의 요인이 동시에 있다. 지속의 측면은 중국이 여전히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즉 중국에게는 북핵 문제가 북한 문제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이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보다 먼저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체제의 운영방식을 비판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을 지지한다는 혈맹적 사고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북핵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언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체제의 균열도 감수할 수 있다는 ‘현상유지 - $\alpha$ ’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중국은 북한이 큰 틀에서 전략적 전환을 포함한 동태적 변화(dynamic change)를 기대했고 이를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실제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중 경협은 발전해왔으며, 2014년 기준 북중 간 교역 규모는 68억 6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18.6%정도로

---

증가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변화의 방법과 최종 상황(end state)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사이의 인식과 기대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학계 일각의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진 학자, 관료 그룹은 북한의 변화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여기에는 자칭궈(베이징대) 장렌꾸이(전 중앙당교), 추수룽(칭화대), 주평(난징대), 스인홍(중국런민대), 청샤오허(중국런민대) 등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두루 있다. 이들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 외교가 정상국가의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중국 정부도 이러한 북한의 벼랑끝 외교행태에 끌려들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들의 논의가 중국학계와 정책서클의 주류적 견해를 안정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논의가 집단지성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들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지만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없이 확대되었다. 주로 이러한 견해는 동북지역의 조선족 학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한반도 지역전문가들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미중 관계나 지역질서라는 좀 더 큰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의 국제화를 강조하는 한편도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남북 관계화를 강조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중국의 당정 내부에서도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미묘한 변화도 있다. 전통적으로 대북한정책은 당중앙 대외연락부가 맡아 왔으나, 그동안 북한 핵실험 국면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국제정보를 가진 중국 외교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최근 다시 공산당이 대북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은 공산당과 노동당의 당 대 당의 관계를 강화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중국 정부도 한반도 정책의 3원칙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한반도 비핵화’에 먼저 언급함으로써 대북 인식에서의 미묘한 전술적 변화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 실제로 북중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고 오랫동안 북한이 공사를 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던 압록강 대교의 완공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북중 간 국경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무역도 전례 없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 등 핵심지도층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관료들 사이에 전략 방향에 대한 온도차이가 있고 중국의 전략적 사고의 변화로 인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늘고 있으며 특히 네티즌들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행동과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에 동정적 여론은 크게 약화되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며,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나 한중 협력을 논의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담론과 편익론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한반도 질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즉 전쟁을 통한 해결, 현재와 같이 ‘전쟁과 평화가 모두 없는(不戰不和)’ 대치국면, 그리고 이러한 대치국면이 점차 통일로 연착륙하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중국의 한반도 인식은 건설적인 역할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적 견해와 한반도의 급격한 현상타파를 반대하고 통일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차원에서 통일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견해가 있다. 즉 통일편익론과 통일부담론이 그것이다.

우선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이희옥 2004, 40-42). 첫째, 강력한 통일한국이 중국 국경에 등장할 경우, 모국을 지닌 조선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분단된 한반도 상황을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에 활용해 온 전략적 카드의 하나를 잃게 된다. 둘째, 현실적으로도 통일한국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은 미국의

---

영향력 속에 편입될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이 중일 간 균형자(balancer)가 되어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 외교의 영향력 공간이 축소될 것이다. 넷째, 중국 외교는 한반도 전체를 단위로 한 중국식 ‘재균형’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이 경제건설을 통한 북한 독자화를 강조하는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 다섯째, 중국이 경제발전과 주변지역의 안정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하여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Scobell 2002, 282-283). 결국 중국은 한반도 현상을 주도적으로 타파할 동인이 크게 없다. 오히려 북중 관계를 재정상화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산업연관효과를 심화시켜 북중 경제의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중국이 통일에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첫째, 한반도 한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북한 모두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도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통일한국을 중국에 우호적 국가로 유인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통일과정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저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외국 군대의 주둔이라는 약점이 없는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분단과정에서 지속적인 북한 경제난과 탈북자 문제가 중국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약을 미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남부 지역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까지 이르는 첨단기술의 회랑(high-tech corridor)은 유럽-러시아-중국-한반도를 거쳐 태평양을 잇는 광대한 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넷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한반도 경제권의 규모가 확대되고 동북아 역내의 상호의존과 역동성이 제고될 경우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할 뿐 아니라, 미중 간 동북아 경제권을 둘러싼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다섯째, 역내 핵 확산의 위협을 제거하고 일본의 핵무장 명분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통일한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과 우경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우호적인 파트너

너를 만들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현상유지를 수용하면서 중국의 국내안정과 대외 협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선호해왔다. 무엇보다 한반도 현상타파가 가져올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플러스요인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통일과정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이 진행되면 통일의 결과가 ‘중립적 평화국가(陳峯君 2002, 291)’가 될 수 있도록 유인할 것이고, 통일방식도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에는 명확하게 반대할 것이다.

## 4. 전망과 과제

### 1) 한국 통일외교의 위상 정립

중국과 북한 관계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연대가 없고 심지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국가와는 다른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양국은 균형을 얻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행동한다. 즉 북중 양국은 협력 시에도 국가이익에 대해 생각할 뿐, 상대의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거짓친구(superficial friend)’ 관계라고 볼 수 있다(Yan Xuotong and Qi Haixia 2012, 105-127). 실제로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호신뢰가 부족하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도 진정한 친구(real friend)로 보기도 어렵다. 중국은 한국의 대미 경사를 지속적으로 우려하면서 경계할 것이며, 한국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자주와 평화’를 강조하지만 한국은 ‘국제 협력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즉 양국의 공통분모는 ‘평화’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은 한반도 통일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중 간 이익이 충돌할 때 미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인식한다. 즉 한국은 기존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연대세력이라기 보다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의 행동이 제약될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과도한 역할을 경계하는 인식구조를 낳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중국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 미중 세력 경쟁을 한반도 통일과정에 끌어들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저선(bottom line)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한중 관계를 작은 클릭조정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좀 더 포괄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 외교의 지렛대를 확대하고 위험 분산(hedging)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외교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과 북핵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고 이를 국제공조를 통해 확인받는 이른바 ‘안에서 밖으로 구축되는 평화(peace built from the inside out)’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방식과 과정이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는 점을 중국에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진출 문제 등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중국의 가장 관심을 가진 전략적 의심을 해소해 주는 한편 분단과 통일비용을 구체적 지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재적 역할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통일이 중국 역할을 통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얻게 될 것임을 현실적으로 주지시키는 것이다.

## 2)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 방안

한중 양국 사이에는 비록 역사 문제와 무역역조 현상 등 갈등요인이 있으나 이것은 전방위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문제는 북핵 문제, 한미 동맹, 지역동맹 체제, 일본의 우경화 등 외부요인들이 한중 관계에 작동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요인이 한반도 통일에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발전을 통해 통일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국은 현상유지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에 기초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구도는 한·미·일은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 대 중·러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북핵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개선과 대화의 습관화를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사실 향후 10년 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미중 관계가 고착될 경우(Michael Swaine 2013, 95-105), 점차 한반도 통일 문제는 한국이 주도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미중 관계의 유동적인 국면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통일 논의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동조화를 넘어 한국이 남북 관계를 주도하여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에게

---

는 한중 양국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묶기 위해서도 북한을 포함한 협력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 위협론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해 중국에게 보다 가시적인 역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을 함께 만들고 이를 한중 경험의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리적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남·북·중·러 국경지역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제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시장화 움직임, 해외투자 유치, 무역 다변화 등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시장의 실험이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

넷째, 강대국의 과도한 영향력 투사 방지를 위한 역내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역내 다양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등과 함께 비전통 안보를 포함한 소(小)다자협력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의 갈등과 협력이 그대로 한국에 투영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 통일을 지역 공공재로 만들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다양한 정부 간 또는 1.5트랙의 전략대화 메커니즘과 함께 통일부 차원에서 ‘한반도 미래비전’이라는 의제의 두고 전략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등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통일 문제를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정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내 중간세력(middle class)을 튼튼히 하여 한국의 통일외교의 진자(振子)폭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된 신호를 확



보하게 되어 북한과 주변 국가들이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통일논의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섯째, 해외무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마지막 냉전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건설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론’을 부각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우회해 통일에 이를 수 없고 대북 전략 없는 통일 전략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 동안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추진되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협력을 유도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통일 방안과 통일 전략이 없는 통일 준비는 공격적으로 비쳐져왔다. 이런 점에서 통일 전략 로드맵에는 방안, 절차, 목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에서의 중국의 위상 등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대한민국외교부. 『중국관계자료집』. 외교부, 2013.
- 이희옥. “중국의 대북한정책 변화의 함의.” 『현대중국연구』. 제8집 1호. 2004.
- 이희옥·차재복 편. 『1992-2012 한중 관계 어디까지 왔나』.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이희옥·박용국. “중국의 대북한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중소연구』. 제37권 3호. 2013.
- 金正昆. “當代中國外交新理念探析.” 『教學與研究』. 2007年 3期.
- 李熙玉. “21世紀韓中關係的課題與探索方案.” 『中國戰略觀察』. 2000年 4期.
- \_\_\_\_\_. “東アジアの地域協力:多角的安全保障協力を中心に.” 『法政論集』. 2011年.
- \_\_\_\_\_. “新的20年:韓中關係的新思考.” 『成均中國觀察』. 2013年 3期.
- 李熙玉·于婉瑩. “‘均衡’的東北亞國際關係與半島安全結構” 『東北亞論壇』. 2014年 2期.
- 陳峯君. 『亞太安全新論』.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2年.
-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 in 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2004.
- Lee Heeok. “China’s Policy toward (South) Korea: Objectives of and Obstacles to the Strategic Partnership.”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3. September, 2010.
- \_\_\_\_\_. “South Korea–China Relations, What has Changed and What will be Sustained?” *East Asian Forum Policy Debates*. No.6. July, 2013.
- Michael Swaine etc. *China’s Military &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Carnegie Endowment, 2013.
- Yan Xuetong and Qi Haixia. “Football Game Rather than Boxing Match: China–US Intensifying Rivalry Does not Amount to Cold War.”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2012.





# 연구 동향과 서평

## 1 통일한국의 과제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임예준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2 미국의 대안적 대전략: 자제?

Barry R. Posen,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김상기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3 적과 마주하기: 전쟁과 평화를 통한 정치심리학적 여정

Vamik D. Volkan, *Enemies on the Couch:*

*A Psychopolitical Journey through War and Peace.*

홍신애 | 건국대학교

## 4 화해, 안보공동체, 통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한 제언

Charles A.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이상근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5 중국의 북핵 평가 및 대북핵 정책의 ‘진화’

장투어성(張沱生) 편저, 『핵전략 비교연구(核戰略比較研究)』/  
장투어성, “북핵문제와 중국의 정책(朝核問題與中國的政策).”

이영학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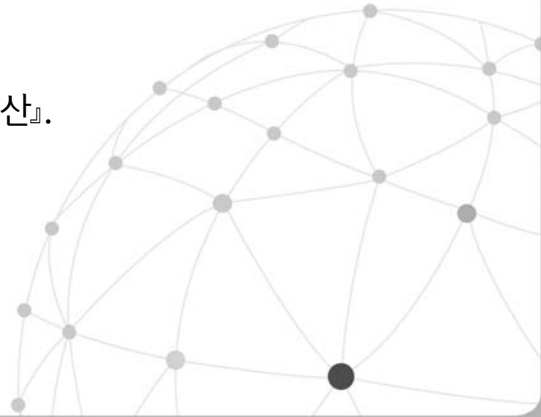




## 통일한국의 과제

-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임예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언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북한에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총회는 2014년 12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등을 통한 책임 추궁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게 권고하는 문구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이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단순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조사위원회의 결론과 책임 규명 및 추궁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은 통일한국이 향후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김하중 교수의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은 시기적절하게 나온 귀중한 연구서이다. 저자는 이 연구서에서 북한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통일한국이 사법적으로 청산해 나가야 할 과정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법치국가의 일탈현상으로서의 체제불법에 대한 이론과 법제도적 차원의 논의를 통일독일의 과거청산 사례와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서는 단순히 이상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의 준비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제1부에서 불법청산의 이론적 기초로서 법치국가와 체제불법을 개관하고, 체제불법의 청산 기준과 유형 및 법가치의 충돌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제2부에서는 통일독일의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불법청산 과정을 소개한다. 저자는 특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관한 형사법적 이론과 독일의 관련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몰수재산과 슈타지 문서의 처리 과정을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3부에서 통일한국의 불법청산의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는 북한의 체제불법과 불법청산의 법적토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문제, 몰수토지 처리와 기밀문서 관리 처리과정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간존엄성을 최고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평화적 불법청산을 통일한국의 과제라 주장한다. 특히 북한 체제의 불법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이를 향후 통일한국이 과거사 정리에 있어 해결해야 할 일차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처리과정에서의 준거이론이 될 법치국가 및 법률적 불법에 관한 헌법 이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독일의 불법청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통일한국이 준비해야 할 북한 체제의 불법청산 방안의 연구에 대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체제불법’의 법적 청산

저자는 북한 정권이 체제유지나 정권연장을 위하여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를 통일독일의 동독의 불법 청산과정에서 등장한 ‘체제불법’(systemunrecht)의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 체제불법은 논의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행위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 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서 실정법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체제 내부적으로 가벌성이 도출되는 범죄는 그것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하더라도 체제범죄라 할 수 없다. 한편, 체제불법에 대한 정의에서 전제한 불법성의 판단은 법실증주의 관점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가 체제불법을 구성한다고 전제한 일부 행위는 국내법 질서에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체제불법은 비법치국가에서 자행된, 법치국가적 이념에 기초하지 않은 행위들을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체제불법을 사법적으로 청산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체제불법의 법적 청산을 협의로 해석할 경우 체제불법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미한다. 이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 체제불법 희생자에 대한 구제와 불법체제 아래서 발생한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나 기밀문서의 처리도 포함된다. 최광의로 해석할 경우 과거 불법체제가 남긴 모든 잔재가 청산대상이 되며, 사법제도나 소유제도 개편과 같은 제도적 청산까지 포함된다. 저자는 헌법학적 관점에서 광의의 법적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했다.

## 동독 체제의 불법유형과 과거청산

동독 체제에서의 불법행위는 1946년 창당하여 1989년 해산한 독일사회주의통합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독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를 표방하였으나, 사실상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스스로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실정법에 근거한 행정행위 또는 유죄판결의 형태로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보다 집권당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자는 독일사회주의통합당 체제하에서의 불법을 비법치국가 또는 전법치국가에서 벌어진 체제불법의 전형이라고 보고, 통일독일이 동독 체제가 남긴 불법적 유산들을 사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청산했던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한다.

통일독일이 청산대상으로 삼은 동독의 체제불법 사례는 국경수비대 총격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내독경계에서의 살인사건, 검사 및 판사의 법 왜곡에 따른 사법불법이나 무혐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자유박탈 등의 사법범죄, 국가공안부의 불법행위, 정치범 석방거래 등과 관련된 경제범죄 및 재산범죄, 선거결과 조작과 관련된 선거부정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정권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의 처벌 문제, 동독 정권의 자의적 지배에 따른 피해자들의 구제문제, 과거 불법적으로 몰수된 토지와 기업의 반환문제, 국가공안부가 양산한 슈타지 문서의 처리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저자는 이러한 통일독일의 불법청산 작업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구제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동독 체제의 불법청산 작업은 통일독일의 법치국가 이념의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통일독일은 불법청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통일조약에 규정하고, 법치국가적 원리와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기본법을 바탕으로 후속 법령을 마련했다. 그러나 통일독일은 실제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소급금지원칙이 문제되었으며,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동서독 기본관계가 문제되었다. 몰수재산 처리와 관련

---

해서는 원상회복과 투자우선의 헌법적 근거가 문제되었으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동독의 불법책임의 승계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의 학계와 실무진은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통일독일의 불법청산은 과거청산에 관한 인류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저자는 이는 ‘원칙과 기준은 물론 방법과 절차를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충실히 의존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러한 통일독일의 경험은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에 있어 좌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통일독일과 통일한국은 사회적, 정치적, 법적 토대에서 차이가 있으며, 동독 체제에서 발생한 불법의 태양과 북한 체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독 체제의 불법청산에서 이룬 법적 성과를 북한 체제의 불법청산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일독일이 사법적 청산과정에서 검토해야 했던 법리적 문제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일한국 역시 당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독일의 경험은 향후 북한 체제에 대한 법치국가적 청산과정에서 교훈과 지침이 될 수 있다.

## 북한 체제의 불법유형과 청산대상

저자는 북한의 체제불법을 1인 독재국가, 인권침해국가, 유추 해석과 소급입법, 전법치국가라는 특성을 들어 설명한다. 북한 헌법은 입헌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및 법치주의의 원리가 배제되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칼 뢰벤슈타인의 분류에 따라 장식적 헌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북한 내의 인권침해 상황 역시 체제불법의 전형이라 지적한다. 저자는 북한의 형사법이 유추해석과 소급효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사법권 독립의 부재와 정권 수뇌부의 의사 및 당의 결정에 의해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인권보장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다.

한편 불법청산의 대상이 될 북한 정권의 체제불법의 태양은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분류하거나,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침해대상을 기준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불법, 남한주민에 대한 불법, 외국인에 대한 불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북한주민에 대한 불법유형은 공개처형, 강제수용, 탈북자 사살 및 납치, 재산몰수를, 남한주민에 대한 불법의 유형은 한국전쟁, 무장공비 납파, 테러와 납치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유형은 외국인 납치와 테러, 통화위조, 마약밀매, 대량 살상무기 수출을 제시한다. 이 중 저자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형사적 범죄행위를 통일한국이 청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몰수, 사회주의적 노동구조의 재편에 따른 직업박탈, 자의적 행정처분 등과 같은 제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도 중요하지만, 정권의 비호 아래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던 정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통일독일이 동독의 정권범죄를 청산하며 경험했던 쟁점사항에 주목해, 처벌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의 결정,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 공소시효, 정당화사유와 불법판단의 기준, 비례성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불법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한편,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통일한국이 승계할 것인가 하는 선결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북한의 정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로서 사회적 조정급부를 행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일한국의 국가재정이나 피해자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독일의 선례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체적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를 정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의 문제를 형사복권, 행정복권, 직업복권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저자는 피해자 구제는 체제불법의 희

---

생자들을 약자로 배려하여 그 이익을 조정해주는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를 필요로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 처벌은 순수하게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피해자 구제는 다원적인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통일한국의 과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실현

저자는 통일이 감성적 차원의 민족 재결합이 아닌, 남북한 주민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 수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북한 정권이 체제유지나 정권연장을 위해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의 청산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적 정화과정을 통해서만이 구성원 모두가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원칙 없는 사면을 경계하며, 북한의 체제불법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이러한 체제불법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통일국가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존재이유가 반감될 것이며, 사회정치적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저자는 북한 체제의 불법을 청산하는 과정이 청산주체의 자의성과 정치적 선동성이 개입되어 자칫 승자의 보복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한다. 또한 절차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체적 기준이 가변적이거나 유동적일 경우, 불법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또 다른 국가불법이 자행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자는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작업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사법절차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통일한국의 불법청산의 토대가 될 통일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통일한국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초로 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된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과제인 북한 체제에서 발생한 불법의 청산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법질서 체계 속에서 원활히 작동함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법적 불법청산의 과정은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인 법의 최고성,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독립된 재판과 사법적 구제절차, 소급입법의 금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과거청산의 해결방안으로 형사적 정의 실현과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사법적 청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해결 과정은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실현방식의 하나이다. 과거 과도기 정의는 정치적 전환기에 이전의 억압적인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법원과 진실화해규명위원회를 설립해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과도기 정의에서의 ‘정의’의 개념은 기존의 법적 대응 방식을 넘어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에 과도기 정의에 관한 논의의 발전을 반영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불법청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의한 과거의 청산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청산절차 역시 승자의 사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헌법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원리에 충실히 따른 불법청산만이 진정한 통합의 과정을 이끄는 과도기 정의의 실현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진정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이익 또한 중요시하는(*in dubio pro reo*) 형사법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저자의 북



---

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사법적 청산과정에 동 원칙이 반영되어 있길 희망한다.

과거청산의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당시의 여론이나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꾀한다면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김하중 교수의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은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연구라고 본다.

## 결 언

저자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과거청산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유엔 총회는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올해 역시 이러한 문구를 담은 결의를 추진 중에 있다. 통일한국 이전에, 또는 북한의 자체적인 체제전환이 이뤄지기 전의 현 상황에서 당국의 관계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규명하고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이용하거나, 임시 재판소의 설립을 통한 해결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방안 역시 현실적인 이행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설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뜻을 모아 해당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행은 북한 체제의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에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문제가 북한 자체적으로, 또는 국제사회의 개입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일한국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통일 이전에 해당 문제가 국제형사재

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한국은 국내법원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판적격성을 인정하는, 보충성의 원칙(complementarity principle)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일차적 관할권을 갖으며, 북한의 체제불법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은 일차적으로 통일한국이 관할권을 갖는 사항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해당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여부와 관계없이 통일한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과거청산’이란 일반적으로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물론 역사가 된 과거의 사실을 온전히 교정하고 ‘청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하며,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상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해 나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과거청산은 역사 전환기의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정의 구현을 지향하는 매우 실천적인 개념이다. 이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 상황에서 통일한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분명 제기 될 과제이다. 비록 현재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과거청산의 과정은 진정으로 통합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김하중 교수의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

## 참고문헌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나남, 2013.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법무부, 1995.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4호. 2010.

GA Res. 69/188, UN Doc. A/RES/69/188, 2014.

Jeffery, Renee & Hun Joon Kim ed.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sia-Pacif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63, 2014.

Teitel, Ruti G. “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16.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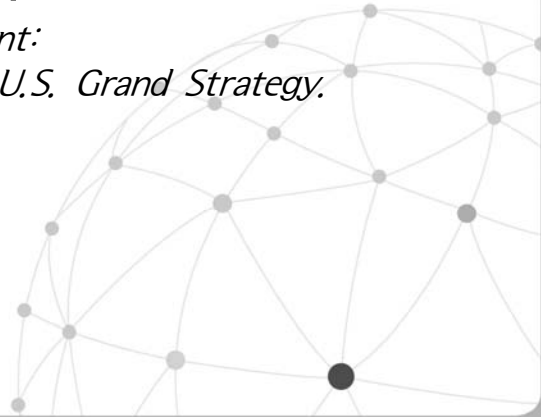




## 미국의 대안적 대전략: 자제?

- Barry R. Posen,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김상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국, 중동, 그리고 미국의 대전략

2000년대의 10년 동안 중동지역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던 미국은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공표하고 중국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동에서 벌인 전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 자유주의적 국가건설의 실패, 그리고 군사적 과팽창 문제는 2008년 경제위기 및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더불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촉진한 주된 요인들이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역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의 재균형은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않았고, 2015년 현재 미국은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모두 도전을 받고 있다. 알카에다의 하부조직에서 출발한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는 2014년 여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였고 미국은 그해 8월부터 다시 중동에서 IS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임기 내 철군 약속을 반복했다.

중동에서 15년째 지속되는 전쟁과 재정문제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력 재배치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Work 2014), 재균형은 냉전시대의 유산인 중심축-바퀴살(hub and spokes) 동맹체제의 재강화를 통해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 목표는 IS의 조속한 격퇴와 중동의 안정 그리고 중국의 팽창 억제를 동시에 요구한다. 하지만 IS 격퇴를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다시 중동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이며(이혜정·김상기 2014),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에 맞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핵심이익 영역을 확장함과 더불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실패국가와 테러리즘이라는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과 체제전환(regime change) 시도는 이미 그 효용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해왔으며,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재균형 혹은 동맹의 강화도 기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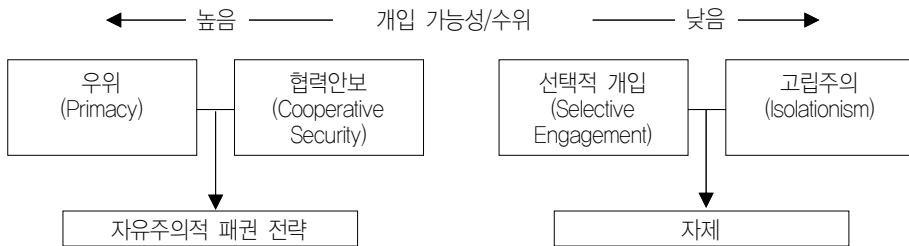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이 직면한 어려움 혹은 도전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 도전을 헤쳐 나가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포센(Posen)은 최근 출간한 저서,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이하『자제』)에서 탈냉전기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추진되어 온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liberal hegemony) 전략이 과도한 위협인식과 과장된 기대 이익에 근거하여 큰 손실과 낭비를 유발하는 “자기파괴적(self-defeating)” 대전략으로서 오히려 미국이 감당해야 할 위협을 증폭시켰고 미국의 전략적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포센이 제시하는 미국의 대안적 대전략은 ‘자제’이다. 즉, 포센은 자유주의적 패권에서 자제로 대전략의 전환을 주장한다.

이 글은 포센의 『자제』에 관한 것이다. 우선은 탈냉전기 미국의 대전략에 관한 논쟁을 간략히 기술한다. 다음으로 포센의 시각에서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제의 대전략이 추구하는 바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제의 대전략의 전망과 더불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탈냉전기 미국의 대전략 논쟁

포센은 대전략을 안보를 위한 국가의 ‘이론’으로 정의하며, 국가가 직면한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안보를 위한 실천적 이론으로서 대전략은 한 국가의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역할을 하면서 개별적 외교정책들의 목표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주권, 영토통합, 상대적 국력, 그리고 안전의 문제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

[그림-1]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대전략 수립에 관한 논쟁



※ 이 그림은 포센의 분류에 근거하여 작성된 개념도임

냉전시대에 소련이라는 분명한 위협에 대응했던 미국의 봉쇄전략이 소련의 해체로 그 생명을 다하게 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탈냉전기 대전략의 수립을 위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포센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대전략 논쟁은 우위, 협력안보, 선택적 개입, 그리고 고립주의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전개되었지만([그림-1] 참조), 협력안보와 우위가 지배적이었다. 협력안보는 탈냉전 초기 부시(George H. W. Bush)의 공화당 정부 시기 동안 민주당과의 협력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전략으로서, 실패국가(failed state), 강패국가(rogue state), 그리고 그들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핵확산을 주된 위협으로 상정하고 군비통제, 안보협력제도, 그리고 군사기술적 우월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위의 전략 또한 협력안보와 마찬가지로 냉전 종식 이후 부상했다. 우위는 핵확산의 위협과 더불어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을 경계하고, 안보협력제도 보다는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포센은 협력안보와 우위 간 수렴, 즉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의 수립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 이미 시작되었고 9·11 테러 이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에서 완료되었다고 논증한다. 클린턴 정부는 미국의 주도과 비대칭적 비용부담 없이는 안보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실패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때로는 유엔 승인 없이도 단행하게 된다(예; 코소보 공습).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 실패국가에 대한 대응보다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전개/전망에 더욱 유의하면서 클린턴 정부의 대외 군사적 개입을 비판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에는 실패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 없이는 미국과 국제공동체가 직면한 위협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국가건설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수립된 자유주의 패권전략은 실패국가, 강패국가,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경쟁국가를 위협의 주된 근원으로 상정하며, 200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2015년 현재 미국의 중동 개입과 대중국 견제 정책을 함께 설명한다.

우위와 협력안보를 포괄하는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은 미국 주도의 단극적 국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그러한 국제구조는 자유주의적 패권을 전 세계로 확장할 기회라는 주장에 의해 지지되지만(Wohlforth 1999; Brooks and Wohlforth 2005; Ikenberry 2011), 그에 대한 반론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레이인(Layne 1997)은 세력균형의 원리에 주목하면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는 쇠퇴의 운명을 맞을 것이며, 미국의 대외적 개입은 축소되어야 하고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외균형은 미국의 지리적 위치의 이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서 동아시아·유럽·중동을 비롯한 지역의 세력균형 유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고려한다는 것이다(Layne 1997; Mearsheimer 2011). 이 전략은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에 상시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

이와 같은 역외균형 전략을 포함한 자제론은 1990년대 중반에 제기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겪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실주의 진영의 학자들이 자유주의적 패권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제론 혹은 역외균형론에 동참하였으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가시화되면서 부터는 자제론이 독자적 대전략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Mearsheimer and Walt 2003; Walt 2005; Posen 2007; Mearsheimer 2011; 이해정 2015). 자제론에 대한 자유주의 패권전략 진영의 반박(예, Brooks et al. 2012/13)은 그 자체로 미국 학계 및 전략가들 사이에서 서로 상반된 대전략이 논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포센의 『자제』는 이와 같은 논쟁의 선상에 놓여있으며, 최근 출간된 문헌 중에서 가장 체계화된 자제론으로 평가 받는다(이해정 2015).<sup>1</sup> 다음에서 『자제』가 제기하는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의 문제를 먼저 기술하고, 자제의 대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의 문제점

포센은 우선 지난 20년 가까이 추진된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이 큰 인적/물적 손실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타 국가들의 대항적 행동을 촉진하면서 미래의 잠재적 비용이 더 증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포센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부터 2011년까지 미국이 제한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벌인 전쟁(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중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경우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동안, 평화정착 또는 국가건설에 기여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독재정권 제거의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무정부상태였다. 그 사이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타 국가들은 미국 패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연성세력균형 또는 외교적 세력균형

---

<sup>1</sup> 탈냉전기 미국의 대전략 논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해정(2015) 참조.

을 시도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무력증강을 추진하면서 경성세력균형에 나섰고,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비했다는 것이 포센이 지적하는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첫 번째 폐단이다.

『자제』는 또한 자유주의 패권전략이 동맹국의 무임승차 및 무모함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포센은 소련이라는 냉전시대의 커다란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럽의 나토(NATO) 동맹국들 및 일본에게 여전히 과도한 동맹공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다. 즉 동맹국들이 자신의 안보를 위한 책임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이 약 4.5%인 반면, 유럽의 동맹국들과 일본은 각각 1.6%와 1.0%에 지나지 않았다. 『자제』의 관점에서 이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명한 무임승차이다. 또한 포센은 동맹 파트너의 무모함과 관련하여,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는 이스라엘이 지역적 불안정을 조장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라크의 말리키(Maliki) 정권과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Karzai) 정권도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국가의 개혁과 통합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고, 이는 현재 두 국가의 혼돈을 설명한다고 강조한다.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에 근거한 군사적 개입이 민족·인종·종교와 같은 정체성의 정치와 대립된다는 점도 포센이 지적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베트남 민족주의와 반미주의 확산 및 그에 따른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동원 촉진을 경험하였고, 이는 미국의 베트남전 실패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포센의 관점에서 미국은 이러한 베트남전의 교훈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 군대의 개입과 주둔은 해당 국가 안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 쉬우며, 이미 미국 패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존재하는 아랍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자신이 속한 인종 혹은 종교집단과 미군이 전투를 벌일 경우 그 집단 안에서 반미주의는 더욱 강해지며 전투병으로의 자발적 동원과 희생감수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 혹은 전쟁 비용은 더욱

---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포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과도한 과제이며, 인도적 군사개입에 대해서도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스니아의 경우 6만 명이 넘는 나토군이 인도적 명분을 가지고 투입되었지만, 내전 종결 이후 다인종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은 실패했으며, 주지하듯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민주적 국가건설은커녕 여전히 내전상태에 빠져있다. 『자제』는 만약 인도적 관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군사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외부세력의 군사 지원에 힘입은 승자가 종전 이후 국가를 통치할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리비아의 경우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자유주의 패권론자들이 인식하는 위협과 기대 이익도 과장된 것일 수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자유무역, 핵비확산, 그리고 자기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들의 보호가 모두 서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부분에서 구멍이 생기면 도미노처럼 문제가 확산되어 미국이 위협에 직면할 것이므로 미국은 그 모든 것을 방어해야 하며 개입해야 한다는 과도한 인식에 빠져있다고 포센은 비판한다. 『자제』는 미국은 고유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상시적인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설령 연관된 문제의 연쇄적 발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월한 힘과 지리적 이점을 가진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센은 자유주의 패권론이 강조하는 기대 이익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자유주의 패권론자들은 핵확산 억제, 지역 분쟁의 감소, 지역에서 지배적 국가의 출현 방지 등을 기대 이익으로 들지만, 오히려 미국의 적극적 개입주의가 분쟁을 조장하거나 핵무장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도모하도록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포센의 『자제』는 지난 20년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배해온 자유주의 패권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과도한 위협인식과 목표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손



실을 초래하고,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조장하고, 민족주의 감정과 반미주의 확산을 유발하고, 비국가단체 및 국가들의 대항적 행동을 촉진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잠재적 비용마저 증가시켰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포센은 자유주의 패권에 대한 대안으로 자제의 대전략을 제시하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제의 대전략

자제의 대전략은 우선 미국이 우월한 국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 유지/강화 문제는 그 자체로서 대전략의 핵심적 사안이자 대전략의 다른 핵심 목표인 주권, 영토통합, 그리고 안전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포센은 미국이 아직 가장 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상대적 쇠퇴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경제부문에서 두드러지지만, 경제 부흥을 위한 해법은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대전략이 주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자제 자체가 상대적 국력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제』의 주장이다. 즉 『자제』의 논지는 자유주의 패권전략이 초래하는 비생산적 개입주의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군사적 과팽창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예산의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것이 곧 대전략이 미국의 건강한 경제 및 상대적 국력의 유지에 기여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자제의 대전략은 미국이 직면한 주된 군사적 위협으로서 핵무기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는 지리적 이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해칠 위험이 매우 적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주의 관점의 『자제』가 갖는 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의 핵확산 방지 주장과는 다르다. 포센은 이른바 ‘핵무기 없는 세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들은 안보를 위해 핵무기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는 것

---

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제의 대전략은 국가 간 핵확산 방지 보다는 타 국가의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그리고 비국가행위자의 핵무기 확보 및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며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핵 공격 억지와 관련하여 『자제』는 국가들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했을 때 미국의 보복이 초래할 자기 파괴를 이미 두려워하며, 미국은 그러한 두려움을 더욱 확실히 하기위해 보복 능력을 유지함과 더불어 보복의 대상, 즉 최초 공격의 주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국가 행위자 또는 테러집단의 핵무기 확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가들이 테러집단에 핵무기를 이전할 경우 해당 국가가 미국의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핵무기 보유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테러집단의 핵무기/물질 확보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미국은 자신의 정보/군사 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국제적 공조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제』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소련의 해체 등 핵보유국의 불안정 상황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적절히 수행되어왔다는 점이다.

유럽은 자제의 대전략이 가장 이행되기 쉬운 지역이다. 포센은 러시아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유럽 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못할 것이며, 따라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인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미국은 나토의 확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나토를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제한적인 안보협력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칸과 북아프리카 등 유럽의 변방에서의 군사작전도 필요하다면 유럽의 이해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성을 키울 뿐이라고 포센은 일갈한다.

자제론이 유의하는 지역은 아시아이며, 중국의 부상이 주된 요인이다. 포센은 향후 20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국력 수준을 가지는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기존의 지역질서를 변화시키고 지역적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가 인식하는 중국의 팽창 위협은 과거

소련과 같은 수준의 것은 아니다. 중국은 두 핵보유국(러시아·인도) 및 핵무장을 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국가(한국·일본)와 근접해있으며, 중국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해양봉쇄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중국이 타 국가에 군사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줄이며, 또한 중국은 소련과 같이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과거처럼 반자본·반제국주의와 결합되어 세력권이 확장될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포센의 자제론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재균형은 냉전시대의 봉쇄전략과 유사한 것으로서 “시기상조이며 잘못된” 전략이라 평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중국을 과거 소련과 같은 정도의 위협적 경쟁자로 보는 것은 과도한 인식이며, 중국은 아직 미국에 필적할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미국의 신냉전적 정책을 환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대중국 봉쇄정책을 펼쳐야 할 미래의 시점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자제론의 입장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에 대해 『자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세력균형 이론에 근거한 역외균형이며, 인도와 일본을 중요한 지역적 균형자로 간주한다. 포센은 우선 인도를 중국이 지역 패권자가 되기 위해 넘어서야 할 장애물로 인식한다. 인도는 핵보유국일 뿐 아니라 중국의 무역 루트(routes)를 봉쇄할 수 있으며, 더구나 과거 군사분쟁 경험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해 협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중국이 군사적 압박 또는 팽창정책을 펼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자제론이 추구하는 지역적 세력균형의 논리이다. 일본은 경제 강국이자 선진적 군사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대만까지 이르는 류큐 제도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에 적합하다. 자제의 대전략은 주일미군을 감축하고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여 미국이 아닌 일본이 일본 안보의 주역이 되도록, 즉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

---

의 핵무장이 중국에 대한 손쉬운 세력균형 방안일 수 있지만, 일본의 역사적 과오로 인한 지역적 불만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단·중기적으로 일본에 확장된 핵역지 혹은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포센은 미국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스스로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중국에 대한 균형을 추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미국 자신의 상대적 국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 실패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 『자제』는 공격보다는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테러리스트 조직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미국에 대한 테러의 한 원인은 미국의 중동 혹은 아랍지역 개입에 대한 불만이라는 점 그리고 테러 근절을 위한 공격적 군사작전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테러집단의 동원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자제론의 주장이다. 미국이 철군 계획을 번복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도 포센은 탈레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하며 아프간인들 스스로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자제의 대전략은 중동 또는 아랍지역에 대한 과감한 개입 축소를 주장하며, 미국 또는 서방 국가로 테러리스트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방어적 역할을 강조한다.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포센은 핵 공격 억지 및 역외균형 정책을 포함하는 자제의 대전략을 주장하며, 이러한 자제론의 기저에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전제하는 자조(self-help)와 세력균형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포센은 미국이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 패권의 전 세계적 확장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야심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그러한 야심에 편승하여 안보 비용을 절감하거나 군사·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동맹 혹은 우방국들도 존재한다. 단극시대에 형성된 관성과 더불어 미국이 아직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자유주의 패권전략이 미국 대전략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포센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지만,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현재 또는 미래의 정치·경제적 이득이 역외균형의 기대 이익을 능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이혜정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대적 쇠퇴 추세, 군사적 과팽창과 재정문제,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피로감은 자제의 대전략이 지지를 얻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포센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자유주의 패권전략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지만, 지난해 오바마가 미 육사 졸업식 연설에서 밝힌 일종의 제한적 개입주의 전략(Obama 2014), 현재 IS의 도전과 관련한 오바마의 지상군 파병 반대 입장,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및 무력증강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대전략이 이미 자유주의 패권에서 자제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앞으로의 미국 대전략의 향배 혹은 자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포센이 지적하듯이 미국의 국력 및 안보 이익 측면에서 자유주의 패권전략이 초래한 문제점들은 대체로 분명해보이며, 미국의 상대적 쇠퇴의 촉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 대전략의 부분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

단기적으로 자제가 미국 대전략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지라도 자제론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제시하는 함의는 생각해 볼만 하다. 포센은 주일미군의 감축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부유한’ 동맹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주한미군 철수의 부수적 이점으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제시한다. 미국의 자제가 한편으로는 포센이 주장하듯이 아시아 혹은 동북아 역내의 세력균형을 유발하



---

면서 지역 패권자의 등장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무력분쟁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 안보딜레마의 발생으로 역내 국가 간 경쟁적 무력 증강을 촉진하면서 협력을 방해하고 나아가서 핵 개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만큼의 동기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대전략으로서 자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자제 또는 역외균형이 추진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가능성은 역내 국가들의 인식과 행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이혜정. “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한국정치연구』. 제24집 3호. 2015.
- 이혜정·김상기. “오바마를 위한 변명: ‘담대한 희망’ 대(對) 역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3호. 2014.
- Brooks, Stephen G. and William C. Wohlforth. “Hard Times for Soft 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no.1. 2005.
- Brooks, Stephen G.,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37, no.3. 2012/13.
- Ikenberry, G. John. “The Liberal Sources of American Unipola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onsequences of Unipolarity*, edited by G. John Ikenberry, Michael Mastanduno, and William C. Wohlfor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Layne, Christopher. “From Preponderance to Offshore Balancing: America’s Future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22, no.1. 1997.
- Mearsheimer, John. “Imperial by Design.” *The National Interest*. vol.111. 2011.
- Mearsheimer, John and Stephen Walt. “An Unnecessary War.” *Foreign Policy*. vol.134. 2011.
- Obama, Barack.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Commencement Ceremony.” May 28, 2014.
- Posen, Barry R. “The Case for Restraint.” *The American Interest*. vol.3, no.1. 2007.
- \_\_\_\_\_.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 Walt, Stephen. “In the National Interest: A Grand New Strategy for American Foreign Policy.” *Boston Review*. February 1, 2005.

---

Wohlforth, William C.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1, 1999.

Work, Robert. "Deput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Work on the Asia-Pacific Rebala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ember 30, 2014.





## 적과 마주하기: 전쟁과 평화를 통한 정치심리학적 여정

- Vamik D. Volkan, *Enemies on the Couch:  
A Psychopolitical Journey through War and Peace.*

홍신애 건국대학교

동아시아는 지금 중국의 부상과 미국 국력의 약화, 일본의 쇠퇴라는 역학관계의 변화로 인한 대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세력구도의 변화는 역내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존보다는 영토분쟁, 역사수정주의, 민족주의의 충돌로 인해 위험한 갈등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와 아베 내각은 국제무대에서 센카쿠 열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정, 난징 대학살 공론화 등을 둘러싸고 양국은 서로를 향해 맹렬한 설전(舌戰)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공격적인 세력균형전 중이다. 동아시아의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trauma)는 한·중·일이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로 발전된 유럽과 달리 그 벽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의 대립구조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적개심은 남북 분단 70년을 맞이하고 평화통일이라는 숙명적 과업을 안고 있는 한국에게 큰 외교적 딜레마를 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

수조건(necessary condition)은 남북한 당사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조건은 중·미·일 파트너들의 공생의 비전을 향한 협력과 지지구조의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이 없이는 도달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 뿐 아니라 동아시아 무대에서도 전략적이며 건설적인 갈등 중재자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역사의 상흔이 짙게 남아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동아시아가 서로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공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화해(和解)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갈등의 저변에 관련해서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들이 출간되고 있다. 그 중 심리학자인 바딤 볼칸(Vamik D. Volkan)의 『적과 마주하기: 전쟁과 평화를 통한 정치심리학적 여정』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국제관계의 역사적 적개심과 같은 ‘비합리적’ 감정의 기능이 어떻게 현실정치 안에서 갈등관계로 출몰하는지를 통찰하고 있다. 볼칸은 그의 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채 남아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는 현재의 국가들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며, 또 과거의 기억에 기초한 ‘선택된 트라우마(chosen trauma)’는 세대를 뛰어넘어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과거의 갈등대상국이었던 특정국에 대한 의도, 동기, 목적에 대한 단서로, 그것을 위협요인으로 인지하며 재현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갈등구조의 근원적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정치심리학적 분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볼칸은 국제관계 정치학자들 가운데도 잘 알려져 있는 (정치)심리학자이다. 그는 심리학자로서, 1977년 미국 국무부가 외교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며 발족한 트랙Ⅱ 외교(second track diplomacy)인 외교심리분과 미국 심리학 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mmittee on Psychiatry and Foreign Affairs) 프로그램과 다양한 분쟁조정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수십

---

년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세네갈, 보스니아, 쿠웨이트 등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분쟁 당사국들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 내도록 일해 왔다. 볼칸의 『적과 마주하기』는, 그간에 그가 분쟁조정자(facilitator)로써, 분쟁 당사국들의 정책가, 외교관, 학자, 정치가들과 오랜 공식 또는 비공식적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얻은 풍부한 심리학적 관찰과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볼칸은 그의 이론을 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이스라엘-이집트 관계, 동서독 관계, 세르비아-발칸 관계, 터키와 사이프러스와 쿠르드인들과의 관계에서의 사례를 통해 펼쳐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적개심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간의 위협인식 형성의 이해와 설명을 위해 볼칸의 저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적과 마주하기? 감정의 국제정치 이해하기

감정은 국제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특별히, 갈등국가 사이에서 감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볼칸은 저서의 제목을 『적과 마주하기』로 칭하였다(의역). 원제는 *Enemies on the Couch*로 직역은 “소파에 앉아있는 적”이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인 거실에 원하지 않는 적을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그림 속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감정의 교류를 연상케 한다. 가장 불편한 적을 가장 편안한 공간인 거실에 초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볼칸이 그동안 여러 분쟁국 당사자들과 감정의 일희일비(一喜一悲)를 경험한 트랙Ⅱ 외교의 한 장면과 같다. 볼칸은 국제분쟁 조정에서 감정의 영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이집트·이스라엘 간의 비공식(off the record)협상 모임에 대한 솔직한 일화를 다루고 있다.

1978년 9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단독 평화교섭을 추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을 함께 초청해 이루어진 13일간 비공식적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함께 화내기도, 울기도 또 웃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베긴



총리는 마지막까지 어떤 평화협정에도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회의장은 좌절감으로 가득했다. 마지막 전날 베긴 총리는 카터와 사다트 대통령에게 자신의 손자에게 줄 사인을 부탁했다. 카터 대통령은 베긴 총리의 손자 이름을 물었고, 곧 베긴 총리의 숙소를 방문했다. 베긴 총리는 카터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자신의 손자 이름을 봤을 때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손자 세대인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괴로워했다. 이 사건 이후에 베긴 총리의 평화협정에 대한 감정(mood)이 바뀌었고, 이때 카터 대통령은 사다트 대통령과 함께하는 만찬을 제안했다. 만찬은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곧 양국이 공식적 협정을 싸인 하도록 이어졌다.

국제분쟁의 조정(mediation)의 과정 가운데 감정의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대표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존경 받는 상당한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에서 화를 내기도 하며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저마다 상대방(the Other)을 곧 적(enemy)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문제를 두고 걸으려는 타협할 의지를 비추기도 하지만 이들의 ‘정신적 실재(psychic reality)’안에서는 “누구의 슬픔이 더 큰가?”, “누가 더 피해를 받았는가?”에 대한 피해의식, 적대감과 불신 등의 복잡한 감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장벽은 서로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협상의 결렬로 이어지게 한다.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감정의 실재를 이해하고 분쟁 당사국의 고정관념과 편견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의 장벽을 풀어낸다면 캠프 데이비드와 같이 협상은 평화적 상호공존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신적 실재’를 이해하는 것은 분쟁을 종식하고 화해의 길목으로 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에서 볼칸은 분쟁 당사국들의 정신적 실재인 상대방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 비인간화와 피해의식과 같은 감정들이 어떻게 과거의 트라우마적 사건과 연계해 국가 정체성이 형성하는지 다루고 있다.



---

## 정체성, 트라우마, 국가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의 인식과 행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기억의 총체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경험을 통해 특정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느끼며,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기초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관시킨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사회적 맥락과 상관 없는 독립변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정치공동체가 전쟁이나 테러 등과 같은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죽는 인명피해를 경험했다면, 그 정치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공동체의 사회적 손실(loss)에 대해 개인의 영역과 같이 슬퍼하며, 자신의 정치공동체가 가해자 정치공동체에 대해 적(the Other)으로 간주하는 생각 역시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 간의 ‘끈질긴 동질적 연대감(persistent sense of sameness)’의 심리적 매커니즘 속에서 개인은 공동체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형성하게 된다.

공동체 정체성은 개인은 보다 큰 사회 공동체인 부족, 민족, 문화, 종교, 정치적 이데올로기 집단, 국가와 ‘우리(we-ness)’라는 깊은 연대감을 공유하며 생기는데, 이것은 종종 ‘우리는 흑인이다’, ‘우리는 크루드인이다’, ‘우리는 무슬림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다’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체성을 연대하며(connect), 공동체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해석을 정치사회 현상의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분석의 틀(cognitive framework)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사건이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정치공동체의 가치체계, 습관, 관습, 규범을 만드는 과정(process) 등을 포함해 주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사건을 의미한다.

예컨대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미국의 국무성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사건은 보통 미국인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슬람 문명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9·11 테러는 미국의 국가안보 영역의



패러다임과 미국이 지향하던 사회적 가치까지 바꾸었다. 대외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의거해 선제적(preemptive) 테러리즘 궤멸을 국가안보 핵심 어젠다로 채택했고, 한 달 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2003년에는 사담 후세인의 알카이다와 연계와, 대량살상무기 보유, 폭정의 명분으로 이라크로 전쟁으로 대 테러전을 전개했다. 국내적으로 9·11 테러와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는 자유주의를 고수해온 미국 사회에 ‘선 안보 후 자유’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해 테러행위가 의심되는 모든 개인의 이메일, 컴퓨터 데이터, 전화 통신의 감청이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개인의 자유와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과 미국 사회의 반향에도 불구하고 발효했다. 이러한 특정한 트라우마적 사건은 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공식,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정책 영역에(internal affairs and external affairs)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동체의 국가적 정체성을 (재)정립한다.

## 적 이미지, 분리 고착된 정체성

정치공동체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내부적으로 민족 분쟁, 종교, 인종 갈등 등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통해 분열을 경험했을 때, 공동체는 분단된 영토적 경계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갖게 된다. 공동체는 영토의 경계와 함께 갈등으로 분열된 공동체를 서로가 다름(differentiation)을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며, 우리(us)와 그들(them)의 경계를 그으며, 타 공동체를 적 이미지(enemy image)로 보게 된다. 공동체는 어떻게든 적 이미지로 투영된 타 공동체와 충돌을 피하고, 충돌로 인해 생기게 될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타 공동체를 향해 적대적 정체성(antagonistic identity)을 갖게 된다.

적대적 정체성은 공동체가 서로를 거부(repudiation)하고 공격성(aggression)을 가지며, 그들 간의 차이점을 부정적으로 투영(projection)하도록 한다. 문제는 이러한 타 공동체를 향한 적대적 정체성, 적 이미지, 우리와 그들이라는 정신

---

적 경계는 고착화되어, 분단으로 인해 나누어진 실질적 경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공동체들의 정서적 영역에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볼칸은 이에 대한 예로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이야기 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평화적 통합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은 과거 민족주의에 기인한 유럽의 패권주의로부터 서구유럽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지역적 질서 창출에 교량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통일 후 독일은 국내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었다. 독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동독 난민들에게 임시거처, 사회진출 보조금, 의료보험, 학자금 지원 등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정부의 통일비용의 지출은 서독 주민들의 불만을 이야기 했고 동서독 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는 좁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독일 정부의 사회통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통합된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동서독의 내적 통합은 외적 통합보다 어려운 과제였다. 서독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과 대등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동독 주민들을 의존적이고, 게으른 자들로 보고, 반면에 동독인들은 자신들을 하위문화로 대하는 서독 주민들을 거만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경쟁적인 사람들로 보면서 상호 이질감으로 내적 갈등은 지속됐다. 분단 40년은 공통의 역사, 문화 언어를 사용해온 독일의 민족적 동질성을 상실하게 하고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를 정서적으로 동독인(Ossie)/서독인(Wessie)로 분리하며, 분단 정체성을 고수하도록 만들었다. 동서독 주민들의 정신적 실재에서는 적의 이미지가 투영된 장벽의 부제와 상관없이 이미 서로의 집단을 우리(us)와 그들(them)로 분리하는 적대적 정체성으로 고착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고착된 적대적 정체성은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 대립적 집단 정체성을 띄게 하고, 통합 이전의 삶에 대한 향수, 통합 이후 사회에 대한 실망, 분노, 서로에 대한 불쾌감, 우월감, 열등감, 굴욕감으로 집단 간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 ‘선택된 트라우마(Chosen Trauma)’

국제관계에서 한 (정치)공동체가 전쟁, 약탈, 인권 유린 등 다른 (정치)공동체를 인위적으로 수치(shame)나, 굴욕(humiliation)을 주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피해 공동체는 가해 공동체를 향해 고통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때 적으로 인한 치명적인 규모의 손실, 좌절감 부끄러움으로 생긴 정신적 이미지는 피해 공동체의 정체성에 강력한 흔적을 남기는 ‘선택된 트라우마(chosen trauma)’가 된다. ‘선택된 트라우마’는 피해 공동체에게 복합적인 심리적 짐(burden)이 되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수치감, 무력감, 패배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피해 공동체는 ‘선택된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 정체성(victimimized identity)에 침윤(embedded) 되는데, 이것을 애도하기 위해 피해 공동체는 시, 노래, 문화, 예술, 정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기억한다. 과거의 사건과 그들 공동체의 영웅적 희생자를 기념하면서 피해 공동체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공동 자각성(collective awareness)을 형성한다.

공동체의 사회구성원들이 ‘선택된 트라우마’에 대해 적절하게 애도(mourn)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을 때 트라우마를 경험한 세대는 그들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수치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며 그들 내면에 남아있는 선택된 트라우마의 기억을 후세대에 심겨놓는다. 트라우마로 인해 손상된(injured) 자화상, 고통, 애통함, 복수심은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기억의 저장소(reservoir)에 저장되어 그들의 정신적 DNA의 일부가 된다. 후세대는 이전 세대의 고통의 정체성을 대표하게 되고, 만일 후세대가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상된 정체성을 효과적 또는 성공적으로 회복, 애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정신적 숙제(task)는 세 번째 세대로 다음 세대에 전의한다.

이렇게 애도, 회복되지 못한 ‘선택된 트라우마’는 공동체내의 수백만 사람들을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정신적 유대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선택된 트라우마’의 애도의 임무는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 공동체의 2세대는 조상세대의 피해와 손실을 슬퍼(grieve)하는 것이 주요 과제일 수 있고,

---

그 다음 세대의 임무는 조상세대와 2세대가 하지 못했던 그들의 손상된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 사회, 문화, 법적 영역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잘못을 가늠하여, 가해 공동체에게 공적 사과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애도해야 하는 세대들의 주요 임무(core task)는 이전 세대가 트라우마를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애도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선택된 트라우마’는 이렇게 공동체의 강력한 정체성 표(marker)가 된다. 이것은 평화의 기간 동안은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공동체에게 ‘선택된 트라우마’를 연상케 하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위기상황이 벌어지면, 내재돼 있는 ‘선택된 트라우마’의 기억과 그 연관된 감정들은 다시 활성화된다. 이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트라우마적 수치와 고통으로부터 잃어버린 손실을 되찾고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 이념(entitlement ideologies)을 세우게 된다. 권리 이념은 그들의 손실을 애도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을 회복하려는 공동체적 자각으로 가해 공동체와 주변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하는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 이념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등장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것을 ‘민족대통일(irrendentism)’,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큰 이상(Great Idea)’, 터키는 ‘범투르크주의(Pan-Turanism)’, 일본의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 극단주의 이슬람의 ‘이슬람 제국주의(Islamic Empire)’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리 이념은 수세기 동안 트라우마적 사건과 함께 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다가 역사적 상황이 변화하거나 공동체의 정치, 군사, 외교적 사건들이 트라우마적 사건을 연상케 할 때 공동체는 재피해의식(revictimization)을 느끼며 복수를 정당화하게 되고 공동체 집단 간의 대립적 편견의 증가는 그룹 분쟁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것은 곧 공동체로 하여금 전쟁이나 분열을 선택하는 비논리적 결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불간은 큰 공동체의 독특한 정체성은 더 광범위하며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만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중 중요하고 특정한 요소는 그 공동체의 지속적이며 특정한 기억이며 세대를 넘어서 형성된 그들의 트라우마적 사건의 역사가 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룹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과거의 트라우마적 사건에 대한 정신적 인식이 그들의 공동체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형성해 우리(we-ness)라는 특정한 지각(sense)을 형성하고 공동체가 함께 회복과 애도를 해야 할 임무

---

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외부적 위기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가해 공동체와 주변 공동체를 향해 재 피해의식을 느끼며 복수를 정당화하는 비논리적 분쟁을 선택한다고 한다.

불칸의 ‘선택된 트라우마’이론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립적 갈등의 역사적 근원을 설명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적인 ‘선택된 트라우마’에 갇혀 적대적 정체성을 갖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위협요인으로 인지한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신민족주의(neo-nationalism)의 발흥, 한국의 위안부, 독도, 역사 교과서 문제, 일본의 중국의 지역 패권에 대한 외교 대응책인 ‘보통국가론’, 중국의 미중의 신형 대국관계를 형성을 통한 역내 ‘일본의 왜소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애도, 인정과 반성, 진정한 사과의 부재는 ‘선택적 트라우마’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로 전의(transmit)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취임 후부터 퇴임 때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했고 이것은 아베 정부로 이어졌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국들에게는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과, 아시아 여성의 성노예, 난징 대학살, 중일 전쟁을 넘어 제2차 대전을 촉발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해 가해국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과 사죄하고 화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일본 제국(大日本 帝國)’의 군국주의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의지로 비추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전쟁 피해자였던 한국과 중국의 ‘선택된 트라우마’는 과거 역사를 부정·왜곡하는 일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극되어 정치적 긴장과 갈등은 고조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고리를 해소 위해서 불칸이 중요시 하는 과정은 ‘애도(mourn)’이다. 이것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생겨진 피해 공동체의 상처와 손상된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 공동체와 가해 공동체가 슬픔을 적절한 방법으로 함께 애도하고 참회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가해자는 지난 과오에 대해 후회를 표현하며, 자신이 충분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 공동체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럴 때,



피해 공동체는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신뢰를 갖게 된다. 이것은 비공식적 대화(dialogue)형태 이상으로,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실한 공식적 성명과 함께, 과오에 대한 구체적 인정과 제도적 개선을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화해적 애도의 모습이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1970년 12월 겨울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학살의 상징적 장소인 바르샤바 추모비 앞에 전 독일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였다. 폴란드인들은 빌리 브란트의 진심의 참회의 모습을 통해 독일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후회하며, 폴란드의 슬픔을 함께 애도했다는 느낌을 받게 됐고, 독일에 대한 적대적 정체성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볼칸의 애도의 중요성에 대한 권고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적대감이 화해로 전환하기 위한 긍정적 통로를 찾기 위해, 또한 통일한국의 과제를 안은 한국이 갈등 중재자로서, 동아시아 파트너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상고할 필요가 있겠다.



## 화해, 안보공동체, 통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한 제언

- Charles A.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이상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마감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과 관련된 국제정치학적 개념으로 안정적 평화(stable peace)가 있다. 안정적 평화는 전쟁이나 전쟁 위협을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정적 평화에 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들이 어떻게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만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다루어 왔다. 이런 연구물들을 검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전략, 단계별 목표, 구체적 방안 등을 탐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과 유지는 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 때문에 더욱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평화 유지를 위한 상호 인정 및 공존이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통일과 평화가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는 통일의 조건이자 과정이며 통일이야말로 평화를 가장 확고히 하는 방법이라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정영철 2010). 그러나 어떤 조건 하에서 평화의 공고화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 평화의 심화 및 성숙 차원에서 연방(union) 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쿱찬(Kupchan)의 *How Enemies Become Friends*는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한의 통합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조건을 탐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안정적 평화의 의미

안정적 평화의 개념은 전쟁의 부재라는 전통적 평화 개념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안정적 평화의 정의는 보울딩(Boulding)이 제시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관련된 인민들이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Boulding 1978, 13).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는 관계에서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인다면 안정적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Kacowicz and Bar-Siman-Tov 2000, 18). 안정적 평화는 일반적으로 양자 간이나 다자간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Kacowicz and Bar-Siman-Tov 2000, 11).

쿱찬은 지역 라이벌들이 전략적 경쟁을 극복한 결과로 형성되는 안정적 평화지대(zone of stable peac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 안정적 평화지대를 “서로 간의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된, 전략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Kupchan 2010, 11). 전략적으로 근접하였다는 것은 지정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 간에는 지정학적 상호작용이 약하고 전쟁 가능성이 낮다. 이런 나라들 사이에는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이를 안정적 평화지대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쿱찬에 따르면, 지정학적 근접성은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경쟁관계로 이어진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근

---

접한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면 이런 국가들 사이에 안정적 평화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Kupchan 2010, 26-30).

쿠팡찬은 단지 전쟁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정적 평화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안정적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억지력에 의한 평화는 안정적 평화가 아니다. 또, 공동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는 평화, 전쟁의 승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무력으로 억압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는 모두 안정적 평화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Kupchan 2010, 32-34).

안정적 평화는 대체로 갈등과 협력의 스펙트럼에서 한 쪽 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보울딩은 전쟁과 평화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상황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안정적 평화와 불안정한 평화(unstable peace)로 나누었다. 그는 평화가 규범으로 여겨지고 전쟁은 규범이 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불안정한 평화라고 보았다(Boulding 1978, 12). 한편, 조지는 평화의 다양한 양상을 위태로운 평화(precairous peace), 불확실한 평화(conditional peace), 안정적 평화(stable peace)로 분류하였다. 위태로운 평화란 일반적 억지(general deterrence)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 평화를 의미한다. 위태로운 평화의 상태에서는 병력의 전개나 특별한 군사적 경계태세 등 즉각적 억지(immediate deterrence)가 자주 필요하다. 전쟁 후의 아랍-이스라엘 관계나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이런 예에 해당한다. 불확실한 평화는 일반적 억지를 통해 주로 유지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위기 및 임박한 위기 시에는 즉각적 억지가 사용되기도 한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위태로운 평화와 조건적 평화의 상태에서는 군사력의 사용이 고려되지만 안정적 평화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군사력의 사용이나 이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고려되지 않는다(George 2000, xii-xiii).



안정적 평화는 민주평화나 안보공동체보다 포괄적인 현상이다. 안보공동체는 참여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생할 뿐 아니라 상호관계를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을 갖추고 있고 정체성도 공유한다. 그러나 행위에 관한 명확한 규범과 규칙이 없어도 안정적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 또, 공동의 정체성이 없더라도 개별적 정체성들이 적대적이지 않고 병존할 수만 있으면 안정적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Kupchan 2010, 30-31; Kacowicz and Bar-Siman-Tov 2000, 2).

한편, 안정적 평화는 비민주국가들 끼리도, 민주국가들과 비민주국가들 간에도 달성될 수 있다. 아세안, 유럽협조 같이 비민주국가들이 포함된 안정적 평화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 평화의 연구자들은 이런 이유로 민주평화론이 내세우는 민주적 규범들이 안정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규범적 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Kacowicz and Bar-Siman-Tov 2000, 2).

## 안정적 평화의 출현 및 심화의 조건과 과정

쿱찬은 안정적 평화가 화해(rapprochement),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 연방(union)의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각각의 성격과 조건 등을 설명하였다. 화해 단계에서는 무력을 앞세운 경쟁에서 벗어나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서로의 기대를 특징으로 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관련 국가들은 상대 국가를 지정학적 위협이 아닌, 무해한 정치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관련 국가들은 행위의 지침이 될 명확한 규범과 규칙의 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또, 공유된 정체성이나 공통의 정체성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각 국가의 이익은 개별적으로 규정되지만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으로 여긴다. 또, 개별적 정체성이 상호 대립하기보다 병존할 수 있게 된다(Kupchan 2010, 30-31).

쿱찬은 화해가 달성되기까지 거치게 되는 네 단계를 설명하였다. 첫째는 일방적 양보(unilateral accommodation)이다.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선의를 알리기

---

위해 양자의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양보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용당할 수 있는 취약한 입장에 처함으로써 상대국이 이 양보를 악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도적 양보가 명백하고, 값비싸고, 돌이킬 수 없어야 호의적 의도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상대 국가에 전달된다. 영토 양보, 요새 파괴, 분쟁지역 비무장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쿠팡은 기존 문헌들이 선행적 양보를 주로 약자들의 편승(bandwagon)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온 것과는 달리 적대국에 대한 선행적 양보가 일반적으로 보다 강한 나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약한 국가보다 큰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세한 위치에 있는 국가가 양보하는 것이 약한 국가가 양보하는 것에 비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하다(Kupchan 2010, 37-41).

둘째 단계는 호혜적 자제(reciprocal restraint)이다. 이는 호혜성에 대한 기대가 쌍방의 협조로 발전하는 것이다. 관련국들은 구체적인 양보의 의도 뿐 아니라 상대방의 포괄적인 동기(motivation)를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상대 국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양측은 기꺼이 양보하며 호혜적 조치를 기대한다. 신중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을 악화시키고 화해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게 된다. 호혜성의 실천은 통상적인 것이 되고, 분쟁 해소를 위한 규칙들, 합의에 의한 결정 등 다양한 억제 메커니즘을 제도화한다. 강한 국가가 무력이나 영향력의 우위를 활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강한 국가는 당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 안정을 위해 투자를 하는 셈이다. 약한 국가는 약세에 따른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게 되므로 이런 거래에 응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Kupchan 2010, 41-46).

세 번째 단계는 사회 간 통합(societal integration)이다. 관련국들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강해짐에 따라 양측은 상대의 호의를 특정한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상대국의 정치체제와 가치체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안정적 평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은 강경론자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양보를 지지하는 엘리트 구성원들도 비애국적 유희론자라는 딱지가 붙여질 것을 두려워해서 침묵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지고 호혜적 자제가 지속되면 유희적 전략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분파가 형성된다. 엘리트는 또한 유희적 전략에 대한 국내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대중을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담론이 재구성되어 상대 국가를 적이 아닌 친구나 동맹으로 묘사하게 된다. 이처럼 상대에게 유순한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경계가 실제로 완화되고 무장충돌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여기게 되고, 안정적 평화가 당연시 되는 것이다. 사회 간 통합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관료, 사기업, 시민들도 관여하게 된다. 안정적 평화의 혜택을 보게 된 기업들이 호혜적 자제와 경제통합을 위해 로비를 한다. 도이치(Deutsch) 등은 경제적 통합 때문에 국가들 간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rivalry)이 약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쿽찬은 전략적 경쟁이 먼저 약화되어야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될 수 있지만 전략적 자제와 정치적 화해의 맥락 속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되는 경우에만 안정적 평화가 시작되는 데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Kupchan 2010, 48). 사회 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상대국이 유순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상대국이 협조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된다. 신뢰는 불확실성의 효과를 최소화하므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경제태세가 약화된다. 불확실성 때문에 협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입장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정치적 내러티브(narratives)의 발생이다. 이는 정체성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담론을 매개로 양립가능한 정체성이 수용되고, 평화적 관계에 대한 기대가 당연시되며, 일종의 사회적 연대감이 생겨난다. 새로운 내러티브의 발생으로 인해 쌍방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

한편 안보공동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화해보다 더 나아간 안정된 평화를 의미한다고 쿵찬은 설명한다. 첫째, 안보공동체에 속한 국가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관리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세력 불균형이 집단적 결속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과 제도를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조약을 맺는 등의 방법이 채택된다. 둘째, 안보공동체에 속한 국가들은 우리성(we-ness) 내지 공유된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또, 구성적인 규범들로 인해 안보공동체가 특유한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계획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예측가능성이 커진다. 이익도 개별적 국익이 아닌 공동이익의 차원에서 주로 규정된다(Kupchan 2010, 183).

안정적 평화의 마지막 단계인 연방은 국가들이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고 영토 경계선의 지정학적 의미를 최소화하여 하나의 정치체(polity)로 통합되는 것이다. 안보공동체 단계에서는 참여국가들 간의 관계가 집합적으로 관리되지만 각국의 국내문제나 개별국가와 안보공동체 밖의 나라들 간의 관계는 각자가 처리한다. 반면에 연방 단계에서는 소속 국가들이 국내문제와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상당히 큰 통제권을 중앙에 양도한다. 이익은 소속 국가들의 공동이익 차원이 아니라 단일한 연방의 이익 차원에서 규정된다. 또, 여러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이 발달하는 것을 넘어 공통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쿵찬은 안보공동체와 연방도 화해와 마찬가지로 네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분쟁 해결의 규범과 절차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 양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계기로 호혜적 자제가 이루어진다. 사회간 통합과 정체성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Kupchan 2010, 184). 쿵찬은 안보공동체가 화해보다 진전된 안정적 평화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화해에 비해 무너지기 쉽고, 지정학적 경쟁의 요소도 보다 현저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화해가 보통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안보공동체는 일반적으로 3개국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규칙들에 합의하는 국가들 중 과거의 경쟁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다 포괄적인 틀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과 세력균형 의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해를 공고화하는 사회 간 통합의 과정이 없이 규범과 규칙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안보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한다. 또, 규범과 규칙에 대한 합의가 엘리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정권교체를 견딜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로 안보공동체가 구성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안보공동체 형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긴장과 분쟁 가능성이 잔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Kupchan 2010, 186-187).

한편 쿠파찬은 평화의 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제도화된 자제(institutionalized restraint)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평화의 출현을 촉진하는 조건이다. 자제가 제도화된 국내적 속성을 가진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일방적 양보나 상호적 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펴기 용이하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민주정이 평화의 출현에 유리한 정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입헌정부도 제도화된 자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헌법에 따른 국내적 정치가 이루어지는 않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술을 통해 전략적 자제를 실천할 수도 있다(Kupchan 2010, 53-60).

두 번째 요소는 양립 가능한 사회질서(compatible social orders)이다. 이 요소는 특히 사회 간 통합 단계에서 중요하다. 양립가능성은 계급 간 권력분포, 민족·인종·종교 간 권력분포, 경제적 생산과 상업활동의 조직원칙이라는 세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 관련 국가들의 사회질서가 양립가능하면 화해를 통해 엘리트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엘리트가 안정적 평화의 과정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양립이 불가능한 사회질서로 인해 통합이 정치·경제분야 엘리트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이들은 화해를 지지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와 평등주의적 사회의 통합은 귀족의 특권적 지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지지당할 것이다(Kupchan 2010, 60-62).

세 번째 요소는 문화적 공통성(cultural commonality)이다. 문화적 공통성은 상호 양보와 화해를 숙고하도록 돕는다. 특히 화해 단계에서의 양립가능한 정체성, 안보공동체 단계에서의 공유된 정체성, 연방 단계에서의 공통의 정체성 형성



---

에 큰 역할을 한다. 홍보 당국과 여론 조성자들이 상대방을 적이 아닌 친구나 혈족으로 묘사하는 내러티브들을 생산하기 위해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연계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Kupchan 2010, 62-66).

화해, 안보공동체, 연방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해 단계에서 연방 단계로 갈수록 안정적 평화는 심화되고 성숙된다. 화해가 달성되어 평화로운 관계가 성숙되면 국가들이 협력을 제도화하고 사회들 간의 다양한 연결들을 확대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국가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관리할 규칙들에 동의하고 공유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안보공동체가 형성된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들 간의 통합이 심화되고 공통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러티브들이 생산되면 국가들보다 상위의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들이 정당화되어 연방 형성의 길이 열린다. 이념형적으로는 화해, 안보공동체, 연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순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정적 평화의 진행은 역사적 우연의 작용에 따라 경로가 달라진다. 안보공동체도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짧은 화해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반면, 여러 해 동안의 화해기를 거쳐 성립되기도 한다. 어떤 연방은 수십 년의 성숙기를 거쳐야 만들어지지만, 훨씬 빨리 형성되는 연방도 있다. 또, 어떤 국가들은 화해 단계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안보공동체로 나아가는 국가들도 있고, 몇몇 국가들은 연방을 형성한다(Kupchan 2010, 30-37).

쿱찬은 안정적 평화를 지정학적 경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럽협조 하에서도 참여국들 간에 경쟁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약화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안정적 평화를 창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방어태세를 완화하고, 개별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한다면 무정부적 경쟁논리에 도전하며 국제사회의 규칙에 따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안정적 평화와 한반도

정전상태의 한반도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전쟁은 멈추었으나 안정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한 평화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안정적 평화일 것이다. 쿵찬이 제시한 화해의 달성이 우선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규범과 규칙에 의해 국가들의 상호작용이 관리되는 안보공동체 단계로의 진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업이 달성된다면 궁극적으로 쿵찬이 안정적 평화의 최종 단계로 규정한 연방의 구성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쿵찬이 제시한 연방이란 남북한의 경우 통일을 의미한다.

안정적 평화의 출현과 심화에 관한 단계론들은 역사적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된 것이므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통일이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아 실현될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쿵찬이 제시한 각 단계는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들이 한반도에서 충족될 수 있을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로써는 충족되는 조건도 있으나 충족되지 못한 조건들도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 등 북한의 변화 방향으로 보아 현재 미비한 조건들도 남한과 주변국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이상근 2015). 일단 남북한이 화해를 이루고 안정적 평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면 안보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평화를 공고화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강력한 억지에 의해서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평화론이 팽배하다. 보수정부들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자유주의적 접근을 피하였던 김대중 정부 시기의 대북포용정책도 안보 중시를 앞세웠으며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었다(김형기 2010, 221-222). 또,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기능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결을 뒤로 미룬 채 먼저 비정치·비군사

---

부문에서의 교류협력, 특히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었다.

안정적 평화론은 적대적·경쟁적 국가들이 남한의 대북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적대적 과거를 가졌거나 지정학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안보분야에서 먼저 양보와 협력을 시작함으로써 안정적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쿠파찬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결과 안정적 평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흔히 설명되어 온 유럽공동체(EC)조차 독일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 독일과의 화해를 먼저 이루어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브뤼셀 조약과 모네 플랜에 입각하여 독일과의 ‘징벌적 평화’를 유지하려던 입장을 철회하고 슈만 플랜을 통해 루르지역을 둘러싼 독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협력 확대가 가능했다는 것이다(Kupchan 2010, 203-204). 쿠파찬은 또한 상대가 민주국가인지의 여부가 안정적 평화의 구축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안보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는 과거의 적대국들이 자신들 간의 다양한 관계 및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명확한 규범과 규칙을 만드는데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과거의 사례들에 근거했다고 해서 쿠파찬이 주장하는 내용이 한반도 상황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그의 주장들 모두가 안정적 평화 연구자들 대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쿠파찬의 지적이 과거와 현재의 한반도상황, 특히 남북 관계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에 부합하는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남한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었고, 약자의 입장인 북한은 정치·군사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해왔으며, 남한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경제협력 확대를 두려워해왔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의 채택과정 및 채택 이후에도 남북한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북한은 부정적 입장이었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의 대북·통일정책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

므로 쿱찬의 주장들이 한반도에서 안정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가 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형기. 『남북 관계 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이상근. “안정적 평화 개념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1호. 2015.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2호. 2010.

Boulding, Kenneth E. *Stable Peace*.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George, Alexander. “Foreword.” In *Stable Peace Among Nations*, edited by Arie M. Kacowicz, Yaacov Bar-siman-tov, Ole Elgtröm, and Magnus Jerneck Lanham. Maryland: Roman & Fittlefield, 2000.

Kacowicz, Arie M. and Yaacov Bar-Siman-Tov. “Stable Peace: A Conceptual Framework.” In *Stable Peace Among Nations*, edited by Arie M. Kacowicz, Yaacov Bar-siman-tov, Ole Elgtröm, and Magnus Jerneck Lanham. Maryland: Roman & Fittlefield, 2000.

Kupchan, Charles A.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중국의 북핵 평가 및 대북핵 정책의 ‘진화’

- 장투어성(張沱生) 편저, 『핵전략 비교연구(核戰略比較研究)』.
- 장투어성, “북핵문제와 중국의 정책(朝核問題與中國的政策).”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1. 기존의 중국의 대북핵 정책

북한의 핵보유 야욕은 한국에 있어서 실질적 안보 위협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북핵 문제는 이미 1993년~1994년 제1차 위기를 유발하였고, 2002년 말 제2차 위기가 발발한 이래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핵은 이미 기술적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당초의 플루토늄 핵무기 뿐만 아니라 2010년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활용한 고농축 우라늄탄도 조립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사일 기술의 향상에 따라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형화도 거의 달성한 상태로서, 2014년 3월 노동미사일의 고각 발사와 2015년 5월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의 사출 실험 등을 통해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및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핵 정책은 1990년대 전반까지는 북미 간의 문제로 인식, 대화를 통

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유엔 안보리 논의 등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2년 제2차 핵위기 발발 이후, 중국은 점차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003년 4월 3자회담을 제의·추진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시작된 6자회담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은 북핵 불용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세 차례의 핵실험 직후, 매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단호한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말에 집권한 시진핑 지도부는 중요 정상회담 계기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대북한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서 미중 관계 및 북중 관계 등에 의해 때로는 비핵화를 우선시한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우선시한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북중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였고, 이에 따라 압박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갈등적 미중 관계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 상황 그리고 지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면서 대북 지원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나갔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협력적 미중 관계와 갈등적 북중 관계 상황에서 다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압박 중심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을 압박하였던 것과 달리 북한과 미국 등의 입장과 행동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위협회피’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이영학 2013).

그러나 최근 북한의 8·20 목함지뢰 도발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전후

---

미사일 발사 실험 가능성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정세 하에,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권력서열 5위인 류원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김정은과 회견하는 등 최근 중국의 대북핵 및 북한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핵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미중 관계 및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을 연구해 온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의 장투어성(張沌生)이 2014년 11월에 『핵전략 비교연구(核戰略比較研究)』라는 편저서를 출간하고, 본인도 직접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순루(孫茹)와 함께 “북한의 핵정책 연구(朝鮮核政策研究)”라는 챕터를 집필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이 책과 챕터에는 중국의 북핵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투어성이 2013년에 『국제안전연구(國際安全研究)』라는 학술지에 게재한 “북핵문제와 중국의 정책(朝鮮核問題與中國的政策)” 제하의 논문에서 제안한 중국의 대북핵 정책을 여기에서 함께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2. 중국의 북핵 평가

장투어성은 북핵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때로는 북한 편향적인 인식 및 입장을 보이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첫번째로, 북한의 핵 개발 동인이 미국의 안보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부득이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북한의 안보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경제와 민생이 더욱 낙후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이 한국전쟁 직후, 핵 개발에 돌입하여 이미 반 세기 이상의 핵개



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 동인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억제를 위해서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위협(재래식 군사 위협 뿐만 아니라 핵위협까지 포함)과 북한 정권을 교체하려는 정책에 직면하여 핵을 보유함으로써 안보를 스스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국제정세 및 삼국관계의 변화로 인해 점차 독립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의 소실 및 소련 해체, 그리고 미국의 걸프전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 및 리비아 정권 전복에 이르기까지의 개입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균형을 위해서이다. 남북 간 종합국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정치안보 관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된 관심과 우려는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의해 흡수통일 당하지 않는 것이며, 핵보유는 한국의 국력 우위에 대한 일종의 균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강성대국 실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다. 국내정치적 수요에 의한 것으로서, 북한은 핵무기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지도 하에 건설한 강성대국의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일종의 카드로서 경제원조 및 대외 정치안보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은 핵무기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때때로 제한적인 양보를 하기도 하였는데, 핵카드를 협상용으로써 경제원조를 얻어 내고, 북미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는데 활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번째로, 북한이 주장하는 핵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자위적 핵억제력 보유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침략 및 핵 공격에 대해서 핵보복을 단행할 것이며, 동시에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 및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13년 3월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은 만약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면 핵으로 ‘선제공격(核先發制人)’ 할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핵보복 정책을 극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전에 천명하였던 입장과 배치된다고 할 수



---

있다. 둘째, 북한은 줄곧 핵개발의 목적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며, 핵 무기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핵무기 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과 우라늄 농축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 등 핵시설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가 국제법에 근거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통과시킨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위성발사 금지 결의 및 북한의 발사행위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주개발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발사 역시 두 가지 목적을 갖는데,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적 외에 미사일 기술 향상이라는 목적도 있으며, 후자는 핵무기 운반수단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1970년대 한반도 비핵지대 건설 주장을 제안하였으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다. 즉, 한반도 비핵지대 건설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주장은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전세계의 비핵화를 먼저 실현해야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변화되었다. 다섯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였고,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 핵보유국의 신분으로 핵군축 협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자회담도 핵군축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북한의 핵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번째로, 북핵 위기 발발 이래, 20여 년간 진행되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각종 양자 및 다자대화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여러 회담 중 북한이 취한 모든 제한적인 핵 포기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해서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경제원조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위기의 주요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간에는 최소한의 상호 신뢰마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설령 대화가 제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시종 압박 위주였고, 전략적 통찰력이 부족하였다. 미국은 실질적 양보를 원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였으며, 심지어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기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네번째로,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13년 3월 북한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소위 ‘병진노선’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경제 발전을 원하면서도 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순된 심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북한은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현실 조건 하에서 경제 발전과 핵보유는 첨예하게 대립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섯번째로, 중국의 핵개발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양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압박을 이겨내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국내외 조건과 중국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첫째,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였던 1960년대 초에는 아직 국제 핵비확산 기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은 핵비확산 기제가 중국의 국가이익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대국으로서 압박과 결과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침략해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핵 보유를 위한 변명일 뿐, 근거 없는 논리이다. 북한의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처지는 이라크나 리비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넷째, 북한이 강조하는 선군정치와 핵무기 발전은 정치 외교적 고립과 경제상황 악화를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 3. 중국의 대북핵 정책에 대한 제안

장투어성은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의 발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며, 북한이 한·미·일과 관계 개선 및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한반도에서 평화기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여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고, 비교적 장기간의 선순환을 통해서 남북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위기의 고조와 한반도 정세의 긴장으로 인해 이러한 전망 실현은 매우 불투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 북한과 미국에게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6자회담의 주요 추진국으로서 중국의 정책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이 부족했던 부분은 두 가지 인데, 첫째, 중국은 줄곧 북미 양자간의 조정자 역할에만 머물렀을 뿐,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할 의사와 행동이 부족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 간의 관계를 전체적인 정세와 구체적인 사건의 발전에 근거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 및 분석에 기반하여, 중국의 대북핵 및 북한 정책이 다음과 같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 북중 관계를 특수 국가관계에서 정상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92년 덩샤오핑이 한국과 수교할 때 내린 전략적 결단이며, 한반도의 냉전구도에서 벗어나서 남북 양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시비곡직과 국가이익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며, 북중 및 한중 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며, 중국의 피동적 한반도 정책을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국이 실현해야 할 중요 목표인데, 평화와 안정은 중국적 목표이고, 비핵화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어느 목표를 우선시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2009년 이래 북한은 여러 차례 '위성'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저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비핵화를 제1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북한 및 국제사회에 명확한 신호를 발신할 수 있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충분한 압박을 유지하여,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이 항상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거나 양자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활용하는데 능숙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외국의 일부 인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확실히 독특한 지렛대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해 비교적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중 양국은 노동당과 공산당 간의 양당관계 및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의 주요 에너지 및 식량 원조국인 동시에 무역 상대국이고 경제개발구의 협력 파트너이다. 현재와 미래에 중국은 이러한 영향력과 지렛대를 유지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용하여,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행위 및 정책에 더욱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넷째,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북핵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하는데 유리한 각종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에는 남북 및 북미 간 양자 대화, 북·미·중 3자대화, 남·북·미·중 4자대화 등이 있다. 이러한 대화 중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동요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의 핵동결과 안전보장의 연계를 단계적 목표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핵전문가 및 전직 고위관리

---

들이 제안한 “3 NOs, 1 YES” 방안인데, 북한은 더욱 많은 핵물질과 더욱 선진적인 핵기술(새로운 핵 및 미사일 실험 포함)을 추구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핵확산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미국이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과의 트랙2 안보대화에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기도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섯째, 한반도 정세의 긴급상황(緊急狀態) 및 갑작스런 변화(突變)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과 예측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마지노선 확정 및 각종 관련 대응방안 마련 등 주도면밀한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적 준비를 해야 하고, 관련 국가와 적시에 위기관리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한반도 군사위기·충돌의 방지 및 통제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핵포기), 핵확산 방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탐색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4. 한국에 대한 함의

시진핑 지도부 집권 이래,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냉각되었던 북중관계가 최근 류윈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핵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투어성이 제안한 중국의 대북핵(한) 정책처럼,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더욱 강하게 주문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및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중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6자회담 당사국들과 접촉하면서 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중국이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정책을 지속하도록 격려하고, 동참하며 함께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현재의 한중 및 미중 간 인식 공유 및 정책 공조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간에는 글로벌, 지역 및 양자 차원, 그리고 안보와 경제 이슈 등에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핵, 북한 및 통일 등 한반도 안보 이슈가 미중 간 경쟁의 이슈가 아니라 협력의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아태지역 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향후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북핵 문제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아태 지역에서 군사력 배치를 강화한다면, 중국은 이것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핵 비확산 레짐이 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유된 이익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핵 군비통제 및 군축을 일종의 전략적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반대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압박 보다는 북한 체제 지원을 더욱 중시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중, 미중, 그리고 한·미·중 공조는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은 그러한 틈을 활용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 북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반면, 북중 간 전략적 신뢰관계가 일정정도 회복되고, 북한의 핵 능력과 기술이 고도로 향상되어 지휘통제 및 안전상 우려가 불식된다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현 수준에서의 핵동결을 주장하며 관리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핵 비확산 레짐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중국은 인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핵비확산 체제에 가입하도록 촉

---

구하고,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파키스탄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용 에너지 및 상업 목적의 핵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핵비확산 레짐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 및 중국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과 기회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일관된 인식과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한편, 우리도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대북 채널 유지 및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채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북측에 한·미·중의 우려를 설득 및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식과 입장을 미중과 공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과 한·미·중 간 의견의 합치점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야 하며, 6자회담 및 다양한 형식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이영학.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3권 3호, 2013.



### 『KINU 통일 플러스(+)] 원고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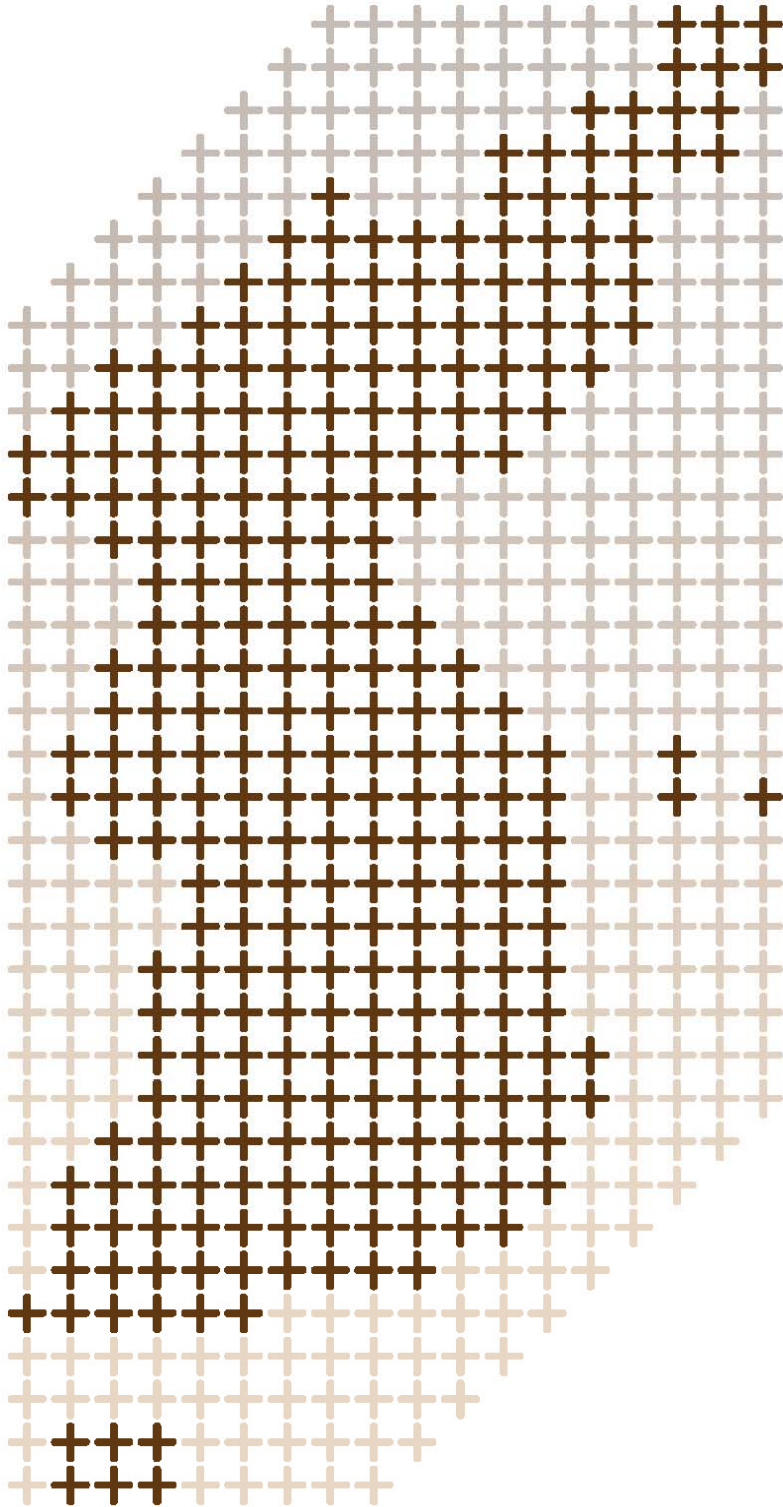
『KINU 통일 플러스(+)]는 년 4회 발행되며 북한·통일 관련 정책적·학술적 쟁점을 발굴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발간물입니다.

보내실 글은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아닌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통일연구원에 있습니다.

※ 원고 보내실 곳: 통일연구원 『KINU 통일 플러스(+)] 담당

- 주 소: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T E L: 02)2023-8000
- Email: kinuplus@kinu.or.kr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2023-8000 | Email: kinuplus@kinu.or.kr